



##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어떻게 이를 것인가

마르크 작서  
2013년 11월

- 아시아와 유럽의 생각하는 이들은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하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경로로 나아가게 할 새로운 모델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내일의 경제”(EoT: Economy of Tomorrow) 프로젝트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경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함께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질문들에 대해 탐구하려고 한다.
  1.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인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침반 역할을 해 줄 경제 발전 모델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2. 진보적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 영역의 지형을 가다듬는 데 도움을 줄 담론은 무엇인가?
  3. 이 새로운 발전 경로를 놓고 벌어질 정치적 논쟁에서 개혁 지향적인 행위자들이 폭넓은 무지개 연합으로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해 줄 강령은 무엇인가?
-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사회”를 위한 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을 가져올 추동력은 공정한 소득 분배와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추동력에는 무역과 재정의 균형뿐 아니라 금융 부문과 자연 환경에서의 안정성도 포함된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을 가져올 추동력은 옛날의 경제를 녹색으로 바꾸고 또 녹색 혁신을 이루는 것이다.



## ECONOMY OF TOMORROW

### 목차

I. 서론	1
II. 서양과 아시아의 상황: 출발점은 다르지만 향후 방향은 수렴한다	1
2.1 거대한 위기를 맞은 서양	1
2.2 아시아 신흥 시장국에 닥쳐올 도전들	8
III. 변화의 정치경제학: 발전 경로를 바꾸는 데 사실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10
IV.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	11
V. “내일의 경제” 발전 모델의 개요	12
5.1. 근본적 원리들	12
5.2. 경제 성장의 동력	16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전략적 목표	17
VI. “내일의 경제”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18
6.1. 규범적 비전: “누구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	20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21
6.3. 성장 동력들	22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24



## I. 서론

2008년의 금융 시장 붕괴로 인해 일련의 위기가 발생했고, 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계를 뒤바꾸어 놓을 만한 잠재적 파괴력을 가진 것들이었다. 전 세계에 걸쳐 수백만의 사람들이 직장과 집과 저축을 잃고 말았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차 대전 이후의 경제 질서에서 핵심을 이루던 나라들의 신용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남유럽 나라들은 긴축으로 질식 상태에 빠졌고, 민주주의의 요람이었던 아테네와 로마는 선거로 뽑히지도 않은 기술 관료들의 관리 아래로 들어가 버렸다. 미국, 유럽, 중동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아시아만이 예외이다. 이곳은 예전에 이미 겪었던 위기에서 여러 교훈을 얻어, 짧은 침체를 겪은 후 바로 탄탄한 경제 성장의 길로 되돌아 온 것으로 보인다.

서양을 불구로 만들고 있는 여러 문제는 금융 위기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그 뿌리는 경제적 문제들보다 훨씬 더 깊은 데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방으로 나온 치료법들은 증상에 대한 일회용 대증요법에 불과할 때가 많다. 개중에는 중세에 성행했던, 환자의 나쁜 피를 빼내는 사혈법 瀉血法을 방불케 하는 것들도 있어 치료는커녕 아예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버리기도 한다. 제대로 된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무질서의 진정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진단해야 하며, 그다음으로 근원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요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지금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또한 서양과 비슷한 경제적,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사회적, 생태적 한계 또한 동일하다. 하지만 아시아 신흥국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여러 면에서 서양과는 다르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서양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여러 기원을 분석하고, 나아가 동양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의 모습을 묘사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내가 펼치고자 하는 주장은, 현존하는 정치경제 질서의 여러 구조에 뿌리박은 기득권 세력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이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사 연구와 정책 제안을 혼합하는 정도의 일상적 방법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는 세 가지 차원의 단일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안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할 것이며, 둘째, 정치적 지형을 유리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담론의 방향을 돌려놓을 것이며, 셋째, 성장 경로를 놓고 벌어질 논쟁에서 여러 세력들을 단일의 무지개 연합으로 규합할 수 있는 정치적 강령을 제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내일의 경제” 아시아-유럽 대화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보고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면서도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모델의 개요를 제시해 볼 것이다.

## II. 서양과 아시아의 상황: 출발점은 다르지만 향후 방향은 수렴한다

### 2.1 거대한 위기를 맞은 서양<sup>1</sup>

이 장에서 나는 거대한 위기를 이루고 있는 여러 층을 하나씩 벗겨내고, 또 가장 핵심에 있는 위기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 장은 서양을 염두에 두고 집필했지만, 서양이 처한 여러 도전 중에는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 겉껍질: 유로화 위기

유럽의 여러 나라가 현재 걸머지고 있는 국가 부채의 수준은 그들을 불구로 만들 지경이어서 자체적인 정책 입안 능력 자체가 엄하게 제약당하고 있다. 사실상 최근의 유럽 정치란 옛날의 빗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빗을 내는 과정 이상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이 위기의 근원과 이에 대한 대응을 놓고서 격렬한 정치적 전투가 벌어지면서 유럽 통합 프로젝트가 갈거리 찢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아일랜드, 스페인과 그 밖의 나라에서 일어난 국가 부채의 폭발은 자국의 은행들을 구제해 주다가 벌어진 직접적 결과가 아니었던가? 경기 후퇴가 한창인 판에 공공 수요에 대해 가혹한 삭감을 가한 것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국민들에게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 아닌가? 통화 안정성을 강조하는 바람에 국가 부채 위기만 장기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보존하려고 했던 유로화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sup>2</sup> 현재 여러



나라의 국가 부채는 더 심층에 도사린 구조적 문제들로 빚어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위기의 원인인 것처럼 분석을 잘못하였으며, ‘유럽 위기’라고 불리는 사태는 상당 부분 바로 이러한 분석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sup>3</sup> 실제로 유럽의 주변 국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상황이 좋았던 시절에는 싼 이자의 신용이 무제한으로 주어질 듯이 보였기에 굳이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 개혁을 강행할 동기 부여가 잠식당했다.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자 이들 국가의 경제는 경쟁력 회복을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절하를 단행할 수가 없었으며, 또 사실상 외국 통화로 가치가 매겨져 있던 이들의 국가 부채는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로화의 구조적 결함은 계속 묵살되었다. 독일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유럽을 경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통합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유로채권을<sup>4</sup> 발행하여 국채 위기를 해결하는 대신 그저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주장할 뿐이었다.

이 위기의 해석과 이에 대한 대응은 정치경제와 담론 헤게모니 사이에 실로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상기시킨다.<sup>5</sup> 통화 안정성이라는 도그마는 당장 자산을 잃을 위험에 처한 투자자들의 관점을 떠난다면 성립할 수 없는 논리이다. 이른바 ‘피그스(P.I.G.S)’ 국가들은 차라리 파산을 해버리겠다고 그래서 자기들 부채를 갚는 일도 중단하고 새로운 금본위제가 되어버린 유로화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금융 자본주의 전반의 위기, 특히 금융 위기의 근원에 대해 요란한 논쟁의 바람이 한바탕 쓸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를 획책하는 기득권 동맹은 이 위기를 해석하는 데 주류적 위치를 견지했다. 따라서 현재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지배적 해석은 규제 없는 시장과 시스템 자체의 붕괴 때문이 아니라 그저 비도덕적인 개인들과 과도한 복지국가 때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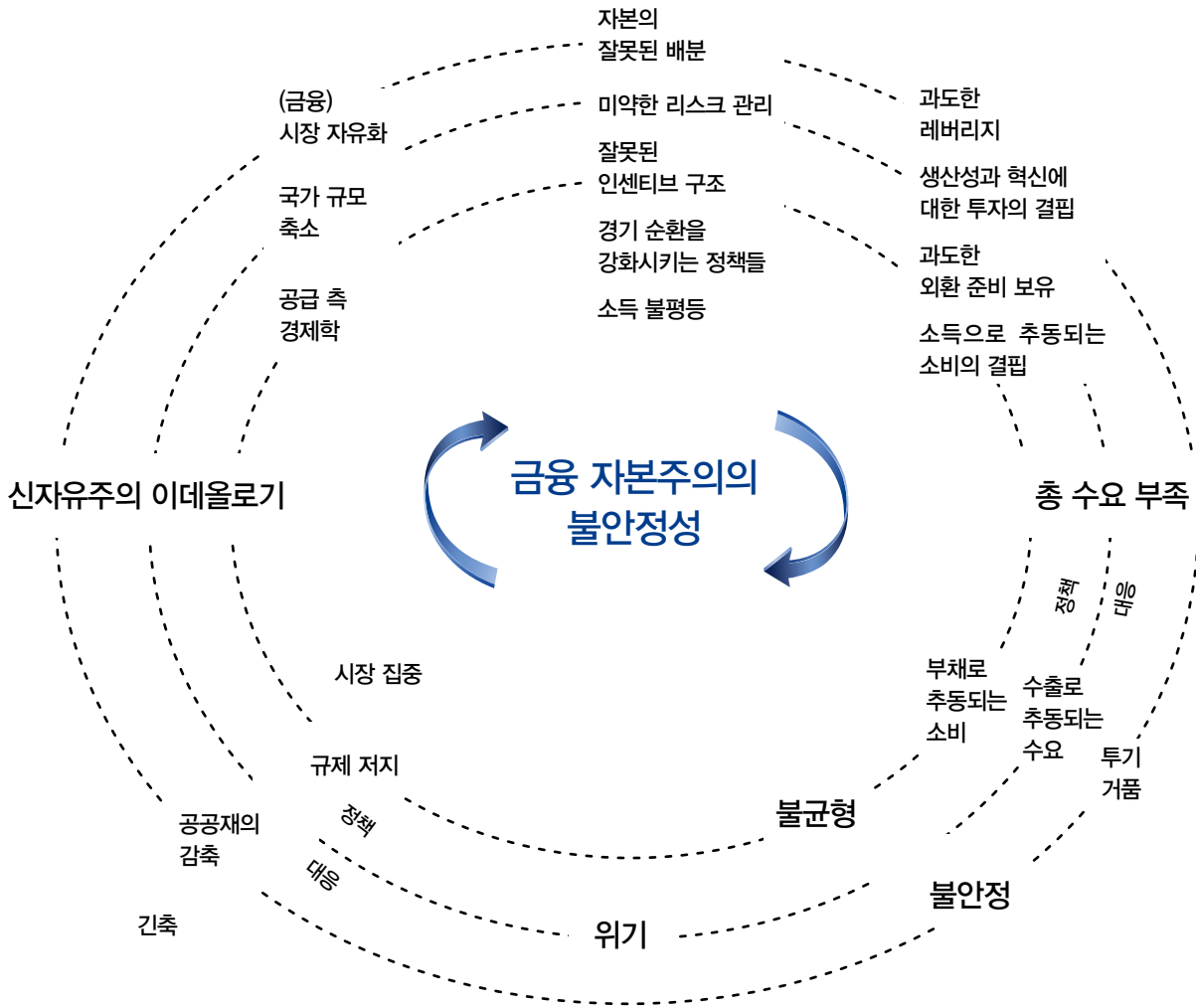
이러한 해석으로 현재의 정책 대응이 나온 것이다. 쇠퇴해가는 국가들은 엄격한 긴축 정책의 연옥 煉獄에서 스스로 뉘우치고 정화함으로써 비로소 참된 미덕의 길로 되돌아오도록 강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부도덕한 부채 중독증을 확실하게 치료하겠답시고, 인플레이

션 공포에 찌든 독일 정부와 기술 관료들이 지배하는 유럽 연합과 신자유주의의 기수인 IMF가 푹푹 뭉쳐 그 옛날 전 세계를 1929년의 대공황으로 몰아넣었던 것과 똑같은 긴축 정책들을 처방하고 있다.<sup>7</sup> 재정 지출 삭감, 탈규제, 민영화 등을 통해 ‘워싱턴 합의’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정책들을 유럽 주변 국가에 강제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이미 예전에 전 세계의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치료책으로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사실 현 위기의 한 원인인 지구적 불균형은 오히려 바로 이러한 정책들의 결함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남유럽 등에서 복지 시스템의 피를 뽑아내는 돌팔이 치료법이 새롭게 또 한판 벌어지려 하는 참이다.

### 두 번째 겹질: 노름판 자본주의의 위기<sup>8</sup>

국가 부채의 위기 근원은 금융 위기에 있다. 비록 주류의 해석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지구적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것은 여러 헤지펀드와 투자 은행들이 벌여놓은 폰지 금융이다.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광적으로 부풀어 오르던 당시 은행들과 투자기관들은 계속 레버리지의 비율을 과도하게 늘여서 마침내 자산 시장이 조금만 하락해도 자본금을 몽땅 날려버릴 정도가 되었다. 월스트리트의 자칭 금융 마술사들은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없었기에 상품을 설계하면서 이자율은 절대로 오르지 않고 부동산 가격은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는 황당한 전제들을 가정으로 취하였다. 실제로 이자율이 치솟고 부동산 가격이 곤두박질치게 되자 이들의 노름판은 급정지를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금융 시스템 또한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말았다. 오늘날까지도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은행들의 취약성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금융 시장은 유럽의 채권 자산들의 안정성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졌다.

그런데 또 다른 금융 위기가 나타날 위험이 크다는 사실에도, 금융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G20 국가 정상들의 서약은 투기로 인해 실물 경제가 입을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헤지펀드, 채권 시장, 신용평가사 등의 권력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 미국 은행들은 자기들 시장 점유만 더욱 굳건히 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파산하기에는 너무 큰” 상태에 이르렀다. 영구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인해 새로운 거품이 추동되고 있어서 또 다른 거품 붕괴의 위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다시 붕괴가 일어난다고 해도 이번에는 구제금융의 여력이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러한 사태 전개는 금융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에서 국가와 시장 행위자들 사이의 세력 균형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 금융 위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노름판 자본주의의 결과이다.<sup>9</sup> 노름판 자본주의의 통치 및 인센티브 구조는 도덕적 해이를 낳았으며,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마구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행태를 조장하였다. 규제 받지 않는 그림자 은행 시스템으로 인해 지구적 금융 시스템은 위험할 정도로 깨어지고 붕괴하기 쉬워졌다.<sup>10</sup> 신흥 시장들과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화폐가 풀려 나오면서 레버리지의 양은 산더미처럼 계속 불어났다.<sup>11</sup>

오늘날 국가, 가정 경제, 금융 부문, 기업 부문 할 것 없이 모두 다 과도한 차입을 해 온 것이 경제 회복의 장애가 되고 있다.

### 세 번째 겹질: 주주 자본주의의 위기

하지만 이번 경제 위기의 원인은 개인들의 탐욕과 월스트리트가 쌓아 올린 불안정한 평가 탐보다\* 훨씬 더 깊은 데 있다. 이 위기를 불러온 여러 압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축적되어 온 것이며, 이 점에서 오랫동안 각각의 압력이 축적되어 한번에 지진으로 터지는 과정과 비슷하다 하겠다.<sup>12</sup>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역주 : 평가 탐이란 탐쌓기 게임을 말한다. 직사각형 나무 조각들로 탑을 쌓아놓은 후 게임 참가자들은 돌아가면서 밑동에서 하나씩 나무 조각을 빼내어 꼭대기에 새로 쌓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탑은 더 높아지지만 더 불안정해지며 마침내 무너지게 된다. 마지막 무너뜨린 이가 술래가 된다.



차원의 문제가 있다. '주주 가치'라는 것이 (즉 투자자들 이익의 이해관계) 기업 부문에서의 게임 규칙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은 생존과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당기 순이익 발표라는 근시안적 달리기 게임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다. 주주 자본주의는 지속될 수가 없다. 단기적 이득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혁신과 생산성에 대한 투자와 마찰을 빚기 때문이다. 주주 자본주의 경제학 및 공급측 경제학이 설교하는 학설은 생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행복의 기초를 유지하는 외부적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공급측 경제학은 충분한 총 수요를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소득이 축소되는 바람에 각국 정부와 소비자들이 압력을 받게 되면 이들은 더 이상 투자도 소비도 할 수 없게 되고 경제 엔진도 굴러가기를 멈추게 된다. 주주 자본주의를 채택한 사회는 나쁜 선택만 하게 된다. 대담하게 잔뜩 빚을 져서 그 돈으로 계속 평평 써대든가 아니면 자국민들을 쥐어짜 수출 수요에 의존하든가 둘 중 하나이다. 앵글로 색슨 국가들 및 다른 몇 나라들은 전자, 즉 빚을 내어 소비자 지출 자금을 대는 경로를 선택하였고, 지구적 상품 유통에서 첫 번째 구매자이자 또 흡수되지 못한 상품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주는 구매자가 되었다. 이러한 접근 덕에 몇 년간은 짜내기식 성장(extractive growth)이 벌어졌지만,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하고 또 경기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던 바람이 끊기자 무너지고 말았다. 독일과 여타 나라들은 내부적인 실질적 가치 절하(internal real devaluation)를★★ 단위 노동 비용의 저하에 기초하여 수출 흑자를 늘려서 살아가는 경로를 택하였다.<sup>13</sup> 독일 등 후자의 길을 선택한 국가들은 아시아의 신흥 제조업 국가들과 함께 전 세계의 제 1차적인 생산자가 되었고 또 생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최종 생산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내에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었으며,<sup>14</sup> 또 이 때문에 이들 국가의 경제

는 수출 주도형이 되어 지구적 수요가 하락할 때마다 이에 심하게 취약한 구조가 되고 말았다. 지구적 수준에서 보자면,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 및 흑자 전략으로 인해 엄청난 불균형이 생겨났고, 이것이 현재의 경제 붕괴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주주 자본주의라는 패러다임이 낳은 역동성이 바로 주주 자본주의 자체를 안으로부터 무너뜨린 궁극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지구화된 금융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불안정성은 1990년 이후의 일본, 1994년의 멕시코, 1997년의 아시아, 1998년의 러시아, 1999년의 아르헨티나 등에서 나타났던 위기와 2000년의 닷컴 거품 파열에서 볼 수 있다.<sup>15</sup> 경기 과열과 거품 붕괴의 순환이 나타난 원인은 마구 풀려난 화폐, 거품, 노름판 자본주의 특유의 과도한 레버리지, 그리고 주주 자본주의가 총 수요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능력 등에 있다. 이 모든 조건들을 풀어놓은 계기는 바로 신자유주의 혁명이었다.<sup>16</sup>

#### 네 번째 껍질: 신자유주의 혁명의 실패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의 근본주의 버전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국가의 강제라고 보며, 자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게 임무를 맡기지만 하면 개개인의 이기적인 '행복 추구'가 '나라의 부'로 전환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그 본질에서 자유를 여러 부정적 자유로 환원한다.<sup>17</sup> 포드주의 모델이 끝나면서 그 때문에 초래된 여러 관성으로 인한 폐해가 만연하게 되자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유 시장의 이상을 만병통치약으로 바꾸어 꺼내 들었다. 서구 나라들의 경제가 석유 위기, 인플레이션, 총파업 등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로지 자유 시장뿐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재, 임금, 환경 보호 등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불리한 요소들이며 어쩔 수 없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일 뿐이라고 본다. 국가는 자유 기업의 목을 조르는 관료제의 괴물이라고 절대 최악시하며, 이런 국가는 반드시 열심히 일하는 기업가들과 창의적 혁신가들의 "등가죽을 벗겨 먹게" 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통속적으로 알려진 이미지와는 반대로, 신자유주

★★역주: 국제수지가 불리하게 되었을 경우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종래의 대외적 환율 가치절하 (external devaluation)가 쓰였지만, 이는 수입 가격의 상승과 국내의 인플레이션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 이에 환율을 건드리지는 대신 국내의 여러 생산 비용 특히 노동 비용이 낮아지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여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를 내부적 가치 절하라고 부른다.



의가 주된 관심을 쏟은 것은 강제적 국가에 맞서 자유 시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삐 풀린 자본주의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이 자본의 비생산적 사용에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자본이 관료화된 사기업들과 경화증에 걸린 공기업에 묶여 있으며 게다가 전반적으로 국가의 규제라는 사슬에 칭칭 묶여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새로운 경영 철학(주주 가치), 더 효율적인 소유제(민영화), 관료들의 복잡한 규제와 규칙의 철폐(탈규제)를 이룬다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창조적 파괴의 힘이 터져 나올 것이며, 모든 이들이 그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가들은 이러한 강력한 담론으로 무장한 채 국가 규제라는 건물을 거대한 철거용 철거로 박살 내 버렸고, 자기들이 손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국가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 여기에도 추가로 동유럽, 멕시코, 아시아와의 새로운 노동 경쟁이라는 채찍질이 더해졌다. “과중한 책임을 덜어내 주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떠나거나 외국 기업에 넘어가거나 파산하고 말 것이다!”라는 게 이들의 논리였다. 그 뒤로 탈규제와 민영화의 광란적 잔치가 줄줄이 벌어졌다. 이것이 지구적 금융 자본주의가 출범하는 출발 신호였다.<sup>18</sup>

이러한 신자유주의 혁명은 사회와 경제를 초토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 줌도 안 되는 엘리트들이 갈수록 더 많은 몫의 부가가치를 실물 경제에서 빨아들여 자기들 소비와 투기의 연료로 쓸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투자 기관들과 은행들에게 노다지판을 조장하였다. 하지만 사회의 다른 부분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쇠퇴를 면치 못하였다.

**다섯 번째 꺾질: 신고전파의 효율적 시장 이론의 여러 결함**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신앙에는 여러 결함이 있으며, 이는 신고전파 경제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고전파 경제 이론은 일련의 근본적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우선 인간은 합리적인 호모 이코노미쿠스로서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최상의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인간 세

상에 존재하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바로 시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이야말로 사회 전체가 자본을 최적으로 활용하도록 배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신앙들은 모두 결함을 안고 있다.<sup>19</sup> 인간들은 개인이든 집단으로든 결코 합리적이지 않으며, 불안, 유행, 미신, 공포 등에서 모두 영향을 받는다. 시장 행위자들은 이상적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과장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과열과 거품 붕괴의 순환 주기를 초래하여 처음에는 수십억 달러의 돈을 만들어냈다가 이를 하루아침에 증발시켜서 사회 전체를 초토화시킨다. 경제학은 이러한 경제적 순환 주기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 및 정치학과 융합될 필요가 있다.<sup>20</sup>

**여섯 번째 꺾질: 짜내기식 성장의 한계**

이러한 근본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을 관료제의 과도한 규제로부터 해방시켜 여러 산업이 재구조화될 수 있었고 포드주의 시스템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당시부터 찾아온 국제 무역 탈규제의 물결 덕에 신흥 시장국들이 산업화를 이루고 지구적 노동 분업 (global division of labor) 전체를 재정비할 기회가 열린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화 효과가 떨어지고 나자 선진국이나 신흥 시장국에서 경제 성장의 성격은 짜내기식 성장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여섯 번째 꺾질이 초래하는 도전들은 다른 꺾질들보다 신흥 시장국들에 더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짜내기식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정치적 한계들에 직면하면서 결국 반드시 성장을 멈추게 된다.

*경제적 한계들*

짜내기식 성장은 저렴한 자원들을 착취하는 것 혹은 미래의 세대들로부터 자원을 꾸어오는 것을 동력으로 삼는다. 단기적 이익을 뽑아가는 주주 가치로 인해, 자본을 축적하여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자본주의의 엔진 자체가 중



단되고 있다. 기업 부문에서 계속해서 자본을 뽑아가게 되면 그 대가로 지구적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연구 개발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계류, 숙련된 노동력 등을 잃게 된다.

마찬가지로 저렴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짜내기식 성장으로 이어지며, 이는 지속될 수가 없다. 외주화가 일반화되면 가뜰이나 힘이 무너지고 있는 노동 운동은 더욱 압력을 받게 되며 그 결과 실질 임금은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총 수요의 부족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번 금융 위기의 뿌리가 된 바 있다.<sup>21</sup>

### 재정의 한계들

유로화 국가들의 국채 위기와 서브프라임 위기는 미래로부터 돈을 꾸는 각종 전략들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경제 시스템 자체의 붕괴는 피했지만, 앞으로 정책 결정자들은 정책 재량의 여지가 극히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를 벗어나려면 산더미처럼 쌓인 채무를 없애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르는 수밖에 없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은 어쩌면 이미 인플레이션으로의 경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임금 소득과 중산층 저축을 갉아먹는 것이므로, 이렇게 되면 국채 위기는 사회적, 정치적 위기로 전환될 것이다.

### 생태적 한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산 양식에서는 주택과 교통 및 수송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한정된 자연 자원을 착취하고 있다. 이 한정된 천연 자원에는 화석 연료 에너지와 대기권의 탄소 저장 능력까지 포함한다. 한정된 자원에 대한 지구적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치솟기 시작한다. 1970년대의 석유 위기가 에너지 공급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가를 상기시켜주지만, 희소한 지표면, 물, 가축들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 또한 비슷한 병목 현상을 만들어 낸다.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은 짜내기식 생산과 소비로 인해 지구라는 행성의 생태계가 교란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현재의 생태계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형성되어 그 이후 인류로 하여금 문명화 과정을 이루는 것을 가능케 하였지만, 깨어지기 쉬운 평형 상태의 복잡한 시스템이다. 기후 변화가 촉발시킨 홍수, 가뭄, 폭풍, 해수면 상승 등은 인류가 역사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수준을 넘어서는 피해를 입힐 것이다. 토양의 질 저하, 사막화, 과도한 토양 착취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이다.

### 사회적 한계들

2008년 붕괴로 접어들던 당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측정된 불평등의 정도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이를 넘어서는 유일한 경우는 1929년의 불평등 수준뿐이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임금제가 사라지고 소비 수요 감소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생겨났다.<sup>22</sup>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 수준과 부의 사회적 격차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생활수준이 낮아지면서 파업과 폭동의 물결이 이어지고, 사회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정의가 결여되면 사회적 평화도 위협당하며, 사회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 도전에 처했을 때 사회 내적인 노동 분업을 바꾸어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훼손된다.<sup>23</sup>

### 정치적 한계들

사람들에게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의 조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정치 체제의 정당성은 무너지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된다. 우익 포퓰리즘 운동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정의의 결여 때문에 빚어지는 공포, 분노, 분개심 등을 악이용하여 보호주의,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 등을 옹호하려 든다. 급진 좌파 운동은 긴축 정책과 노름판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면서 세력을 모으지만, 애초에 이 위기를 만들어 낸 생산성과 혁신의 근원적 위기의 극복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짜내기식 성장의 여러 정치적 한계로 인해 정치체(국민 국가)와 정치적 체제(민주주의)에 더 큰 위기를 부가한다.





### 일곱 번째 낚시: 국민 국가의 위기

이토록 위험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몰아치는 시기가 되자 사람들은 국가의 보호와 민족이라는 따사로운 품을 찾게 된다.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대안을 내고자 하는 포퓰리스트들은 국민을 “우리의 집, 우리의 성, 우리의 피난처”라고 보는 담론을 부활시킨 바 있다. 하지만 국민 국가는 금융 자본주의에 고삐를 채우고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며, 또 이 테러리즘의 시대에 안보를 제공하는 등의 과제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국민 국가는 더 이상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해 줄 능력은 물론이고 위험을 막아낼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여러 지구적 차원의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과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새로운 민족주의 운동이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담론 지형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정책 결정자들이 초국가적 수준으로 주권을 이전하여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협치(governance)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 여덟 번째 낚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책 선택의 여지가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다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금융 위기를 통과하면서 정치 무대 위의 꼭두각시 인형들을 움직이는 줄들이 눈이 아프도록 뚜렷이 드러났다. 여러 나라의 국가 부채 위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위기이다. 민주주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 낼 능력도 없고 또 그들을 인도할 힘도 없기에,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 희생을 감수하자고 설득할 수도 없다. 설령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도 대중적 지지를 동원할 능력이 없는 이들은 결국 기득권 집단들의 압력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 시민들은 삶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금융 시장과 다국적 기업은 채무를 줄이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 이 둘 사이에 갇힌 민주주의 지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이 문제들을 해결할 자금을 융통해 오는 숙제를 미래로 연기만 할 뿐이다. 민주주의의 지도자들은 상황을 뚫고 나갈 정치적 여지도, 대안적인 비전도 없는 처지라 TINA(“대안이 없지 않은가! There is no alternative!”) 라는 구호

뒤에 숨을 따름이다.<sup>24</sup> 이와 동시에 사회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한 공공의 논쟁은 매체가 벌이는 곡마단 쇼와 같은 수준으로 저질화되어 버렸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선거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은 환멸에 지친 유권자들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 낼 힘을 더 이상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은 선거에서 선출되지 않는 기술 관료들에게 넘어가 버렸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위원회를 주름잡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로비스트들과 거물 학자들의 만만한 밥일 뿐이다. 이 위기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공공연하게 손발이 꼬박 묶여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의회가 굳은 결의를 다진다 해도 의회 자체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하며, 또 금융 시장이 강제하는 조건들을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관철하기 위해서 아예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기술 관료들을 정부의 수반으로 앉히기도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는 시민들의 정치적 열정이나 참여가 없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 반대다. 지역 사회와 SNS에서는 시민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한껏 내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경멸적 무관심을 표하며 저항 운동, 지역적 고립주의(님비 NIMBY), 단일 이슈 활동에만 의지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탈산업사회의 필요에 맞게 적응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대량생산 산업사회의 획일적이고 익명성을 띤 양식과는 반대로, 탈산업사회의 “개인화된(personalized)” 경제에서는 갈수록 소수의 유연한 팀제로 조직된 개인들의 창의성이 원동력이다. 고도로 분화된 탈산업 사회에서는 생활 스타일, 가치, 이해관계 등이 모두 다원화되어 있기에, 집단행동에 맞추어 제도화된 여러 단체는 이들에게 매력은 가질 수가 없다. 민주주의적 참여를 위해 새로운 메커니즘을 놓고 수많은 실험을 했지만, 민주주의의 3.0에 대한 업데이트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sup>25</sup>

### 양파의 최중심: 형이상학의 블랙홀

정치 엘리트들은 왜 시장에 항복해 버렸나? 어쩌서 그토록 많은 나라들이 큰 불평 없이 신자유주의 개혁이 초래하는 참상들을 받아들인 것일까? 왜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기를 멈추었을까?



이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모든 유토피아적 비전들이 실패해 버린 데 대한 실망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모두 알아서 각자도생”이라는 급진적 시장주의의 접근법에 대문을 열어준 것이다.<sup>26</sup> 20세기에 벌어진 숭한 전쟁과 잔학 행위들은 종교적 유토피아나 세속적 유토피아나 모두 전체주의의 어리석은 광란임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났지만 이로 인해 좋은 일들만 생긴 것은 아니다. 부가 증대되었지만 반드시 인생이 더 행복해진 것도 아니다.<sup>27</sup> 모든 환상은 깨졌고, 모든 희망은 환멸로 종결되었고, 모든 확실성은 해체되어 버렸다. 그러자 계몽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진보한다는 근대성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거대한 체념에게 길을 내주고 말았다. 서양은 그동안 혁명 전선의 지평을 항상 시야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선 영웅적인 투쟁을 벌일 외부의 적도 없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극단적 행동들과 우매한 짓들을 저질렀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참이다. 따라서 예전처럼 혁명의 지평선을 시야에 두고 달려가는 힘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신은 죽었음이 선언되었고, 공산주의의 낙원은 환멸만을 남겼으며, 국가는 무능한 존재로 전략해 버렸다. 그러니 이제 모든 희망을 시장에 걸 수밖에 없었다. 원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자신이 신에게서 나온 것임을 결코 숨긴 적이 없었다. 바로 이러한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는 식의 진화론적 신비주의에 대한 거의 종교에 가까운 희망이 시장을 우리 시대의 물신 物神 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정치 혁명이 실패로 끝나버렸다면 이제는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상호 작용에서 추동되는 사회적 진화에 희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신비한 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신앙이 흔들려 버린 상태이다. 그다음에 남은 것은 허리가 부러질 정도의 부채, 기후 변화, 지구적 쇠퇴라는 참으로 차가운 현실이다. 꿈의 상실로 실망에 빠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과거에 이룬 여러 성취를 그저 기술 관료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종의 형이상학적 상부 구조 (Überbau) 없이는 재정적, 경제적, 정치적, 민주적, 사회적 위기 그 어떤 것도 힘 있게 싸워낼 수가 없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약속이 없다면 진보라는 이

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좋은 사회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뭉치지 않는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유토피아적 꿈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늘 당장 부닥치고 있는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조차 하려 들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오바마의 “예스 위 캔”이라는 구호가 환멸에 빠진 대중들의 마음을 크게 울릴 수 있었던 이유이다. ‘희망의 담대함 (the audacity of hope)’이야말로 주체를 다시 그 중심의 역할로 되돌리고 ‘변화’를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발자국이다. 오바마의 낙관적 열망이 현실에 휩쓸려 사라져가면서 그 뒤로는 을씨년스런 현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말해주는 것이 많다. 대중들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튼튼하게 참호를 파고 들어앉은 현상 유지의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배타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질서를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무언가 새로운 경제 모델이 없다면 방향성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위기관리를 할 수 없다. 새로운 질서에 대한 비전 없이는 정책 수립 또한 방향타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 2.2 아시아 신흥 시장국에 닥쳐올 도전들

아시아의 성공 스토리는 이러한 서양의 이야기와 큰 대조를 이룬다. 수십 년간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아시아의 여러 사회에서 많은 부분 빈곤에서 탈출했으며 또 급속하게 늘어나는 중산층이 창출되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 경제는 지구적 노동 분업에 깊숙이 통합되었으며 아시아의 호랑이들은 선진국 세계의 정상권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한국, 중국, 인도의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적인 선도 기술 기업들로서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도 급속하게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모든 성공 이야기들이 ‘워싱턴 합의’의 권고 사항들과 크게 다른 발전 모델을 사용하여 성취된 것이라는 점이다.<sup>28</sup> 자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신앙은 아시아의 국가 중심적 경제에서는 결코 헤게모니를 가진 적이 없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한국, 태국 등은 오히려 일본 모델을 (이는 국가가 조정하는 산업 정책, 중상주의적 수출 진흥, 저렴한



노동을 결합한 것으로 좀 더 최근에는 ‘베이징 합의’라는 이름이 붙었다) 따른 덕에 실로 멋지게 일어설 수 있었고 중국과 베트남이 그 뒤를 따랐다.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아시아의 여러 나라 경제가 호황을 이루면서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자 큰 이득을 얻었다.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타락하고 무능한 관료제의 손아귀로부터 민간 부문을 해방시켰던 덕에 경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면이 크다. 인도 등 몇몇 나라들은 갈수록 투기적 투자와 금융 탈규제로 돌아서고 있지만,<sup>29</sup> 신자유주의적인 ‘워싱턴 합의’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가 아직도 지배적이다.<sup>30</sup>

그리고 아시아는 정말로 1997/98년의 위기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배웠다. IMF의 좋지 못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의 금융 시장은 완전히 탈규제화 되지 않았다. 자본 통제를 시행했던 말레이시아는 한때 절대 악으로 낙인찍히기도 했지만,<sup>3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 정부는 지금도 자국 경제를 자본 통제로 보호하고 있다. 그 결과, 이 국가들은 월스트리트의 붕괴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이들은 IMF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외환 준비금을 쌓아 놓았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는 지구적 불균형을 더 악화시켰고 또 지구적 총 수요의 부족을 부추겨서 현재의 금융 위기의 터전을 닦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시아 나라들은 지금 유럽과 미국 같은 종류의 국가 부채 위기와는 거리가 멀다.<sup>32</sup> 물론 이 나라들이 미국 및 유럽 경제에 대해 ‘디커플링’ 되지 않았을까라는 희망은 이 나라들이 지구적 노동 분업에 얼마나 깊게 통합되어 있으며 또 수출 수요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현실적이지 못하다.<sup>33</sup> 하지만 아시아 나라들의 경제가 위기 이후에도 신속하게 반등하여 다시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성공적인 발전 경로들 또한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여러 해 동안 관찰자들은 중국이 ‘경착륙’ 대신 ‘연착륙’ 할 확률을 논의해 왔다. 좀 더 최근에는 금융 위기의 불길한 전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더 자주 나오고 있다. 차입이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있으

며, 잠재 성장률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 이는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출현했던 익숙한 경고 신호다.<sup>34</sup> 아시아와 세계 경제가 깊게 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위기는 곧 다른 나라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임이 분명하다.

경착륙을 막을 수 있다고 해도, 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제들은 짜내기식 성장의 여러 한계를 이미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 지역에서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여기에는 인근 나라들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도 포함된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 및 서비스 부문으로 통합시키게 되면 짜내기식 성장은 큰 추동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저렴한 노동의 공급이란 한정된 자원이니 결국에는 인구학적 한계들에 부닥치게 되어 있다. 중국, 한국, 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다. 이들보다 더 작은 주변 나라들이 외주를 받는 장소로 새로 떠올랐지만 이들 또한 동유럽 나라들과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sup>35</sup> 수출 중심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았던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는 국제 경기 침체에 따른 변동성과 노출 가능성<sup>36</sup>, 그리고 사회적 혜택이 거의 없는 단기적 성향을 알게 되었다. 공적 자금이 사회기반시설이나 연구개발과 같이 꼭 필요한 장기 투자에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인 외국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보조금으로 낭비되고 있다. 태국과 여타 동남아 국가들은 새로운 부동산 거품이 생겨나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값싼 노동력이라는 경쟁 우위가 사라지게 되면 노동 집약적 산업들은 더 임금이싼 지역들로 이동할 것이며, 짜내기식 노동 주도 성장의 원천도 말라버리게 된다.

많은 나라들이 마구잡이 산업화를 겪으면서 아주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다. 미친 속도로 질주하는 산업화로 인하여 환경은 심하게 악화되었다.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회 안정성이 위협당하며 정치적 체제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폭력적인 봉기와 풀뿌리 저항은 확산일로에 있다.

아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의사 결정자들은 옛날의 모델들로는 더 이상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들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sup>37</sup> 아시아의 생각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경로로



옮겨가도록 도와줄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적 발전 모델이 어떤 모습을 띠는 것인가는 뜨거운 논쟁거리다. 아시아의 “길을 찾는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 모델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중국은 비스마르크식 독일 모델의 다양한 요소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 자국의 복지 전통과 연계해서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사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또 지구적 금융 위기의 충격을 피하고자 거대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던 것에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케인즈주의적 본능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최근의 임금 정책 변화 또한 국내 소비를 부양함으로써 수출 수요의 침체에 대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 한국, 대만은 산업 정책을 활용하여 노동집약 산업에서 하이테크 산업으로 가치 사슬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보여준 바 있다. (비록 소극적일 때가 있지만)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또한 자신들이 녹색 성장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sup>38</sup> 중국의 생태적 산업 정책들은 더욱 성숙해 보인다.<sup>39</sup> 이 모두를 종합해 볼 때, 진보적인 경제 및 사회 정책들이 아시아 국가 내의 노동 분업을 바꾸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시아인들은 유로존 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중 많은 이들은 유럽인들이 그동안 너무 방탕하게 살아온 게 아니냐는 신자유주의의 노랫가락을 따라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럽식 복지 시스템을 들여오는 것은 의제로 떠오르지 않는다. 또한 사회 보장에 대한 논쟁을 보면 아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은 아주 상이한 담론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인들은 사회 보장을 사회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지만, 아시아인들은 (최근의 인도네시아는 주목할 만한 예외이다) 사회 보장에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경제 살리기라는 관점에서 (즉, 인적 자본의 생산성 향상, 국내의 소비 수요 증진, 노동 시장의 탄력성 증대 등) 보거나 혹은 정치적 안정성의 (즉 사회 혼란 대신 사회 통합을 강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III. 변화의 정치경제학: 발전 경로를 바꾸는 데 사실과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의 위기를 연구하는 전 세계의 분석가들은 이 심각한 위기에 여러 차원이 중첩되어 있다는 점을 점점 더 이해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위기관리와 장기적인 대안적 시스템의 구성을 놓고서 엄청나게 논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위기 대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치계와 재계의 엘리트들은 결함투성이 모델들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오히려 애초에 위기를 만들어 냈던 바로 그 약품을 처방이라고 내놓고 있다. 대규모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은 그 성격이 변질되어, 오히려 “파산시키기에 너무나 큰” 금융 기관들의 권력만 엄청나게 키워 놓았다. 사람들은 갈수록 자신들이 선출한 정치적 대표들이 과연 사적인 시장 행위자들의 기득권에 맞서서 공공선을 증진시킬 능력이 있는 지 의심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도 지구적 기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거나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실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국제적인 죽기 아니면 살기식 경쟁에 대한 엘리트들의 공포라는 똑같은 복병을 만나서 침몰하고 말았다. 요컨대, 우리들의 경제 시스템에 여러 결함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들은 똑같은 정책들을 고집하고 있다.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정치경제학에 있다. 재계, 정치 및 학계의 엘리트들은 모두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서 혜택을 보는 주요한 수혜자들이다. 이들은 이 체제 덕분에 현재의 위치를 얻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 체제에서 이득을 얻고 있다. 서양의 현상 유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담론이 계속해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 위기의 여파로 수많은 논쟁이 벌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질서에 어떤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이 있는가를 일깨웠으며 또 이에 대한 여러 대안을 현실 가능하게 다시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담론은 여전히 담론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 정책 제안이 있다고 해도 오로지 그 제안들이 ‘잘못된 쪽’에서 지지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부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논리와 주장들도 단지 주류 담론에서 확신하는 사항들과 모순된다는 이유



만으로도 간단히 무시당하고 있다.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말해도 되는 또 행해도 되는 것들’의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확장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고 있다. 현행의 패러다임의 헤게모니 아래에서 사회화된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이 패러다임이 유효하다는 신망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대안 모델들을 상상할 능력조차 없는 상태이다. 요컨대, 모든 부문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무언가 결정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반대다. 현상 유지를 하려고 애쓰는 강력한 동맹이 존재하며, 이들이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자원과 강제력을 어느 만큼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는 물론이고 권력과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에서도 이들과 반대 세력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이들 쪽으로 기울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라. 서구의 진보적 행위자들이 현상 유지 동맹에 대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된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아시아의 진보 정당, 노동조합, 시민 사회도 종종 이보다 더 힘이 약하다.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아시아의 진보적 행위자들은 근본적 구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는 정책 실현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주류적인 담론은 현재 위기의 근원이 시스템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대안적인 행동 노선에 대해 사람들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사유를 위한 개방성도 결핍된 상태이다. 진보적인 정책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제안한다고 해도 전혀 실현되지 못하는 일이 번번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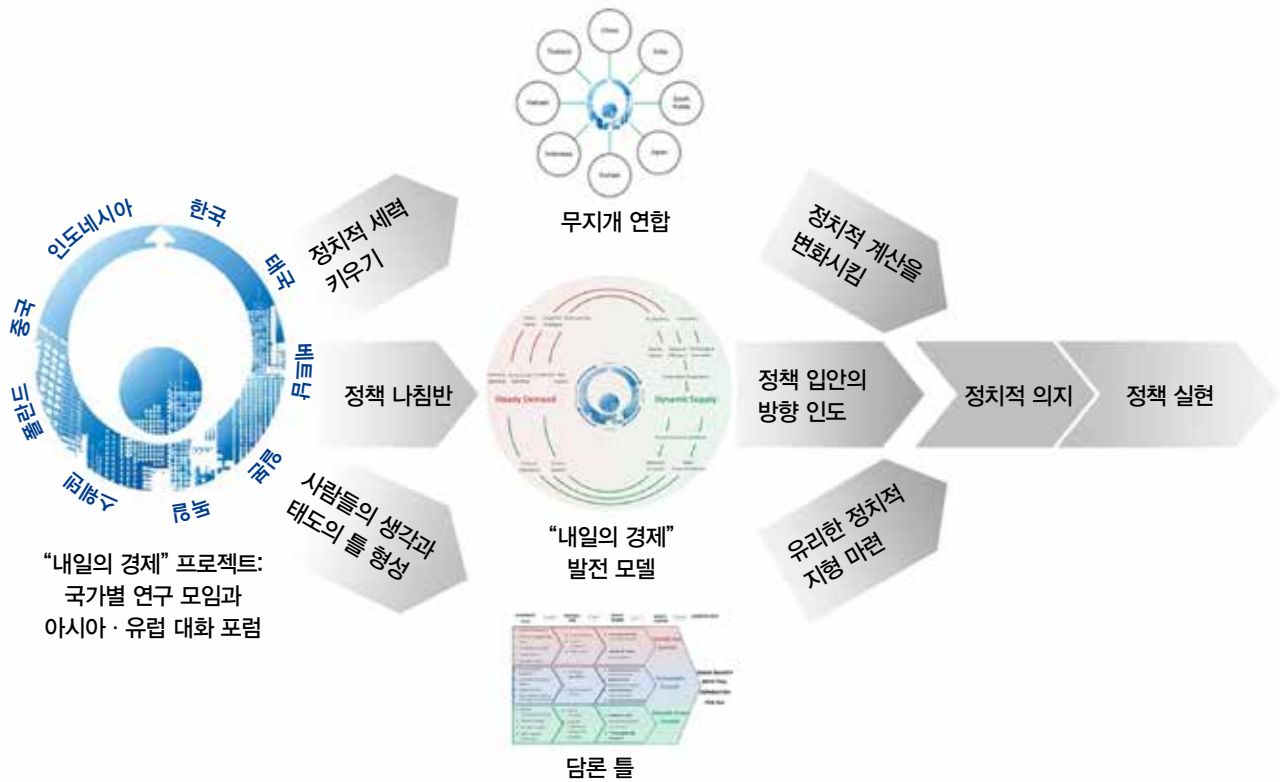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현재의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도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생태적, 정치적, 사회적 여러 도전에 적극적으로 맞붙어 해결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구성할 것. 둘째, 이 모델이 제시하는 여러 정책의 현실화를 가로막는 현재의 불리한 정치 지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한 설득력을 가진 담론을 구성할 것. 마지막으로 현상 유지 동맹에 맞서서 정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을 키울 것.

#### IV.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

이러한 배경에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Friedrich-Ebert-Stiftung)은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의 목표는 대안적인 발전 경로를 찾아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함께할 담론 연합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베트남에서 열린 국가 모델 워크숍에서는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1.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인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종의 나침반 역할을 해 줄 경제 발전 모델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2. 진보적 정책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정치 영역의 지형을 가다듬는 데 도움을 줄 담론은 무엇인가?
3. 이 새로운 발전 경로를 놓고 벌어질 정치적 투쟁에서 개혁 지향적인 행위자들이 폭넓은 무지개 연합으로 함께 힘을 합칠 수 있게 해 줄 강령은 무엇인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이 다양한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위기를 해결해 줄 획일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회는 자신의 특정한 지역 조건에 맞는 맞춤형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만 한다. 이를 전제로 아시아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는 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독일, 스웨덴, 폴란드에서 같은 일을 하는 이들과 함께 모여 분석과 아이디어 그리고 개혁을 실행에 옮겼을 때의 첫 번째 경험 등을 교환하였다. ‘내일의 경제 아시아·유럽 대화 포럼 (Asia-Europe Dialogue Forum on the Economy of Tomorrow)’은 방콕 (“괜찮은 자본주의 Decent Capitalism”<sup>40</sup>), 싱가포르 (“녹색 일자리 Green Jobs”), 서울 (“수요 주도 성장 Demand-driven Growth”), 그리고 다시 방콕 (“안정과 균형을 성장 Stable and Balanced Growth”) 등에서 일련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여러 도전 과제를 보면 참가자들이 대단히 이질적인 국가군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한 수렴 현상이 나타났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학자들은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울, 델리, 방콕 I & II” 합의에 동의하였고, “내일의 경제” 발전 모델의 개요를 만들기로 했다.



## V. “내일의 경제” 발전 모델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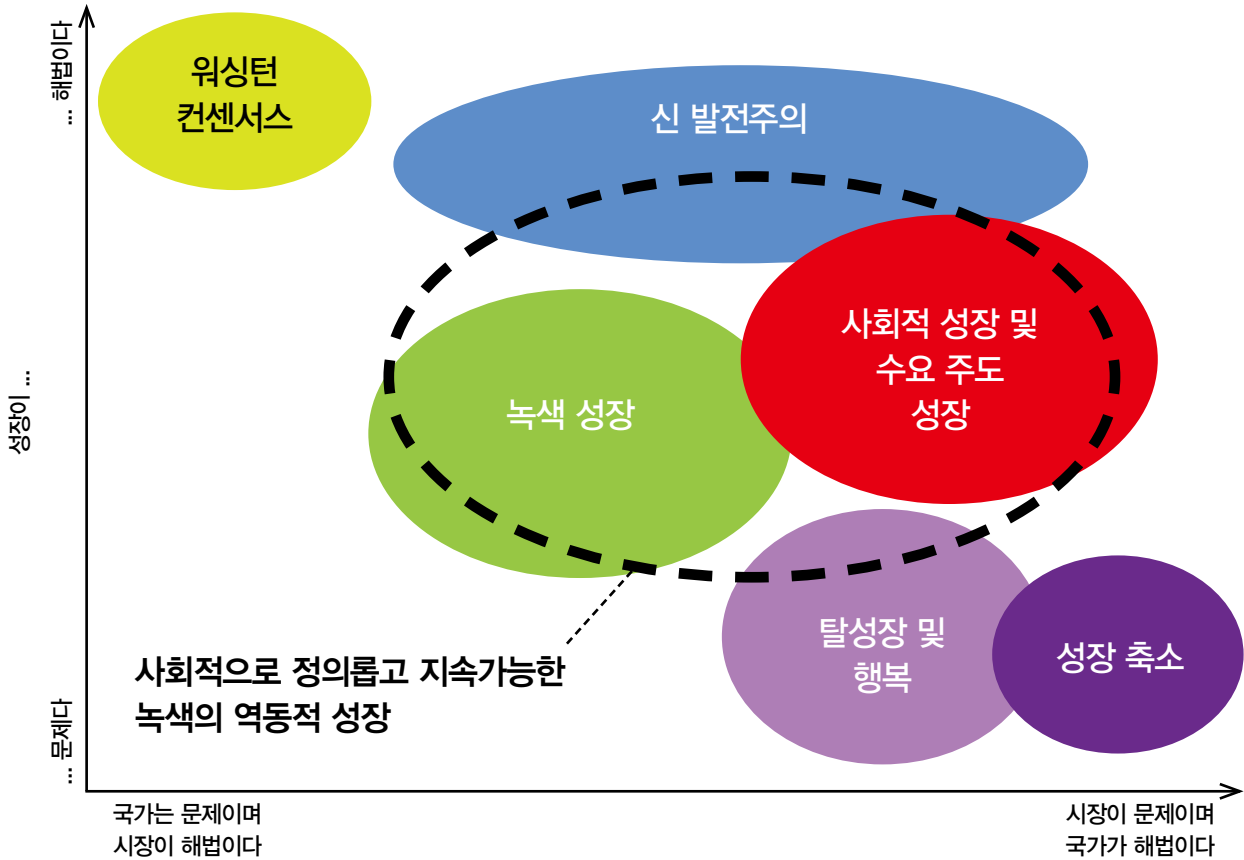
“내일의 경제” 모델은 거시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정치적 위기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순환의 모습을 그려낼 필요가 있다. 이 과제는 엄청난 도전이다. 화석 연료의 고갈과 기후 변화로 촉발되어 이미 전조를 드러내고 있는 여러 재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 경제의 생산, 소비, 교통 및 수송, 주택 등, 다시 말해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재검토해야 하는 엄청난 작업이 필요하다. 주주 자본주의가 야기한 사회적 격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정치, 경제를 재정비해야만 한다. 호황과 거품 붕괴가 반복되는 순환에 실물 경제가 말려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 자본주의의 최심층부를 개혁해야만 하며, 방대한 지구적 및 국내적 불균형은 질서 있는 방식으로 해소되어야만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여기 참가하는 연구 모임은 폭넓은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어 이러한 도전과 적극적으로 맞붙어 씨름하는 데도 여러 다양한 접근법을 내놓은 바

있다. 담론에 대한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존 모델을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의 독특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모델을 연결해 주는 다리들은 일부분 그러한 담론을 정식화하는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다 (필자는 다음 장에서 모두에게 개방된 담론의 틀 하나를 제안할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학문적 엄밀성과 경험적 유효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5.1. 근본적 원리들

“내일의 경제” 발전 모델을 규정해 주는 일련의 근본 원리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이 모델은 다른 모델들과 뚜렷이 구별된다. 경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며, ‘모든 이들이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를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일의 경제” 발전 모델은 꾸준한 수요와 역동적 공급 사이에 평형을 증진하려고 노력한다.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과 지속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핵심적인 규범의 목표이지



만 또 동시에 질적 성장을 추동해주는 엔진이기도 하다.

### 성장을 추구하나 질적 차원의 성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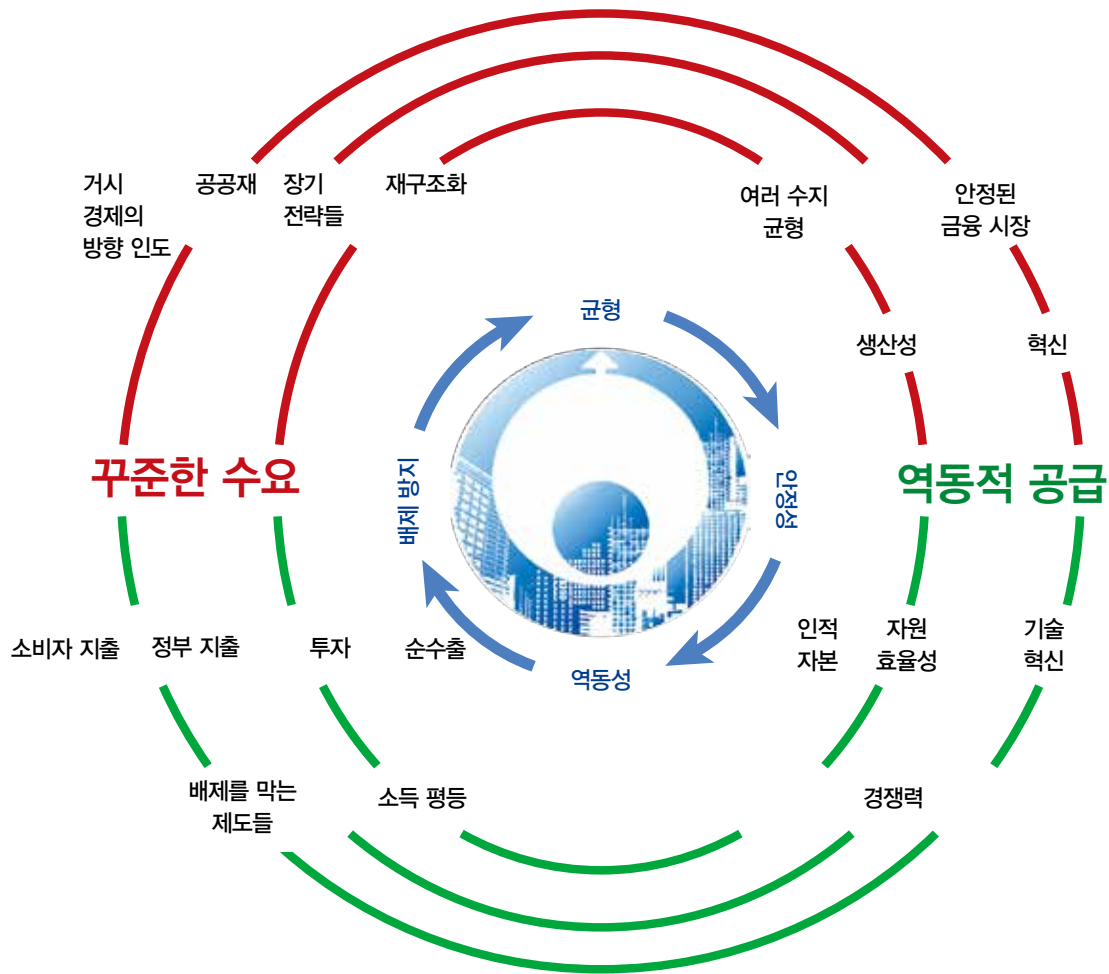
경제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류 발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또 그것이 가능한가에 관한 지구적 논쟁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의 비판자들은 이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 성장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성장의 종말”이 필요하다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GDP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신 더 전체론적이며 인간적인 목표들을 추구할 것을 원한다. 하지만 이 스펙트럼의 반대쪽에서는 경제적 고통, 성장의 침체, 환경 재해, 사회 불안의 증가와 더불어 심지어 더 큰 금융 위기의 재발을 두려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sup>41</sup> 지구적인 총수요 부족의 부정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많은 아시아 나라들은 수출 수요의 침체에 내수를 키워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인구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를 소화하는 한편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신흥 시장국 및 개발도상국은 매해 2조 달러를 신규 인프라에 투자하고자

한다.<sup>42</sup> 이러한 생각들은 ‘성장의 종말’이 필요하다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탐탁하지 않다. 그래도 아시아의 신흥 시장국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여러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GDP 성장에 대한 집착은 생태적, 사회적으로 크나큰 왜곡이 일어나므로 질적인 성장 패러다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 GDP로 측량하든 아니면 좀 더 전체론적 벤치마크로 측량하든,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며 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경제의 근본적인 기능은 누구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 현명한 국가가 인도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 모델은 그 스스로 독특한 정치경제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경제 발전이란 시장의 개인



행위자들끼리의 무작위적 상호 작용으로부터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이 '자유 시장으로 추동되는 혁신'이라는 것이 미신이든 아니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주택, 교통 및 수송을 향한 변화를 전혀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 30년간의 경험에서 고삐 풀린 시장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도전들에 대해서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했고, 오히려 그 자체가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내일의 경제”는 “시장의 마법”에 대한 맹신을 단호히 거부하며, 발전의 방향을 놓고 사회적으로 폭넓게 사회적으로 숙의하도록 장려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민주적 국가의 관계에 균형을 다시 설정해야만 한다.<sup>43</sup> 부채와 통화 가치 절하의 악순환 고리를 깨기 위해서 국가는 경제의 재구조화, 배제 없는 분배, 더 많은 일자리로 가는 경로를 설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여러 국가들은 이념적으로 불신을 당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불구화된 상태인지라 자신들의 정책 인도의 기능을 거의

포기해 버린 상태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신감과 정책 여지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선택해야 할 것은 더 이상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가 아니라 여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러 사회경제적 왜곡을 바로잡으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량을 갖춘 “현명한 국가(smart state)”를 구축할 방법이 무엇인가이다.

하지만 경제적 지구화는 국민 국가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훌쩍 벗어났다. 신흥국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떠받치는 지식, 금융, 기술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경제가 개방적이고 규정중심이어야 한다.<sup>44</sup> 이와 동시에 국제 협력 및 지구적 거버넌스는 강화되어야 한다.

### 안정성과 균형

금융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은 물론 지구적 불균형 또한





이번 금융 위기를 촉발시킨 요인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안정적이며 균형 잡힌 기초를 필요로 한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왜곡과 경기 후퇴를 겪지 않으면서 꾸준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금융 자본주의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호황과 거품 붕괴의 순환을 피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구화된 금융 시장에서 생겨나는 불안정성에 대해 예방 접근을 마련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 근거를 이루는 무역과 금융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또한 새로운 지구적 균형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사회적 환경이 불안정하다면 경제 성장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생계 수단을 보존하면서 급속한 사회 경제적 변환의 충격을 완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규범적 정책 목표이지만, 이는 또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주요한 구성 조건이다.

공공 투자 및 소비와 재정 지속가능성의 필요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국가 부채,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사이의 관계는 비록 긴축 정책 옹호자들의 그릇된 주장만큼 그렇게 단선적인 것은 아니지만,<sup>45</sup> 이 관계가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과 정책 여지에 가져올 충격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구조적인 예산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과 단기적 차원에서 경기 순환에 맞서는 위기 대응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필요를 양립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지를 정당치 못한 것으로 만들고 또 양질의 공공재 공급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실로 사용될 때가 너무나 많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다. 하지만 선거로 집권한 정부는 자신을 선출한 국민들로부터 경제 발전의 경로를 설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잠식하는 데 악용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 꾸준한 수요, 역동적 공급

주주 가치 패러다임 아래에서 단기 이익에 집착하는 시장은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단기주의는 영리 활동의 지배적 전략이 되었고, 투자 기관 및 은행은 기업 부문에서 자본을 뽑아내어 이것을 투

기에 사용할 힘을 얻게 되었다. 시장 근본주의로 충분한 총 수요를 낳는 방법은 부채로 추동되는 소비와 “쟁가 탐 쌓기식 레버리지” 밖에 없다. 소득 불평등과 국가 재정 삭감은 사회의 골간 구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소비 및 투자 수요가 부족해져 경제 성장을 질식시키기도 한다.<sup>46</sup> 이런 상황에서 총수요를 창출하는 과거의 전략은 수출 잉여를 얻기 위해 기를 쓰든가 국가와 소비자의 부채를 장려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다시 국내외 차원에서 여러 불균형을 낳았고 이것이 금융 위기로 이어진 바 있다. 지구적 외환 준비 시스템이 갖는 여러 결함에다가 워싱턴 합의가 지배하는 국제 금융 기관들에 대한 신뢰 결핍이 결합되면서 신흥국들은 엄청난 양의 외환 준비금을 쌓아놓게 되었고, 이것이 지구적인 총수요를 더욱 약화시키고 말았다.<sup>47</sup>

이 새로운 성장 경로는 역동적 공급과 꾸준한 소비 사이에 균형을 취해야 한다. 지구적 및 국내적 불균형을 회복하려면, 소득 기반의 수요를 경제 성장의 엔진을 돌아가게 할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소득을 더 평등하게 분배하면 급속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로 몸살을 앓았던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돈을 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들의 소비를 자극하게 된다. ‘창조적 파괴’라는 ‘공급 측’ 역동성을 풀어놓기 위해서 혁신과 생산성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한다.<sup>48</sup> 하지만 유한한 자원을 짜내기 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혁신과 생산성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여기에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재능을 배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역동성이 생긴다

신자유주의 모델에서는 경제적 역동성이 불평등과 경쟁이 정해놓는 인센티브로부터 생겨난다고 되어 있다 (“탐욕은 선한 것이다”). 자유 시장은 혁신과 생산성을 추동하며, 자원에 대한 경쟁은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0년에 걸친 공급측 경제학의 실험을 통해 얻은 생산성 향상은 보통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동시에 “주주 가치 자본주의”는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사회적 격차를 벌려 놓았다.

이와 달리 “내일의 경제” 모델에서의 역동적 성장은 누



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동력으로 삼는다. 사회가 모든 성원에게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시민들 모두가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누구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생활에 최대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시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인종, 성, 종교 때문에 차별에 직면한다면 국가는 이러한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 모든 시민은 교육과 의료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들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 5.2. 경제 성장의 여러 동력

모든 경제 모델은 성장을 견인한다고 여겨지는 여러 메커니즘에 희망을 걸게 되어 있다. “내일의 경제” 모델은 “성장의 여러 동력”을 명시함으로써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정하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 소득 기반의 수요

소득의 평등은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sup>49</sup> 케인즈적 승수 효과를 통하여<sup>50</sup> 수요와 투자를 자극한다. 총수요 침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저소득층의 소비 수요를 강화해야 한다. 진보적 임금 정책은 생산성 향상이 소득과 소비 증대로 연결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임금 닻(wage anchor)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줄인다면 발전 또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인적 자본

사람들이 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사회 모든 구성원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혁신이 촉발된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 창의성, 모험의 에너지, 생산성을 끌어내 쓸 수 있다면 누구도 배제되는 일 없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회의 잠재력도 최대한으로 풀려 나오게 된다.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데에는 국가와 민간 부문 모두 역할을 해

야 한다. 국가가 공공재를 제공하면 소비 수요도 강화하지만 노동력의 건강 상태와 능력을 개선함으로써 노동 생산성 또한 증가한다. 종합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은 인센티브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부나 보조금보다 우월하다.<sup>51</sup> 사회보장을 제공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여러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과도하게 저축을 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므로 총수요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sup>52</sup> 사회보장 시스템은 경제 위기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면서 또 노동력의 질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벌여준다.

#### 효과적인 자본 배분

자본을 생산성과 혁신의 목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며 역동적인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실물 경제는 산업 재구조화 (특히 제 3차 산업 혁명을 목적으로 한 재구조화), 연구 및 개발, 노동력의 숙련화, 시장의 발전 등을 가능케 해 줄 탄탄한 금융의 기초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금융 부문이 지구화되면서 자본을 배분하고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그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체계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sup>53</sup> 따라서 은행업은 이제 다시 기업 부문에 대한 봉사 기능으로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sup>54</sup> 금융 자본주의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에서 생겨나는 여러 위험을 최소화해야만 한다.<sup>55</sup>

#### 생산성과 혁신

생산성과 혁신을 통해 역동적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는 인프라, 기계 장비, 생산 조직, 인적 자본, 연구 및 조사, 자원 효율성 등에 대한 큰 투자를 요구한다. 하지만 유럽, 미국, 일본에서는 탈 레버리지, 재정 균형의 회복, 장기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의 확립 등의 과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물론 지나친 경제 계획의 만용을 부리는 것 따위는 절대 삼가야 하겠지만, ‘가치 사슬을 타고 올라가는’ 경로를 설정하는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정하는 산업 정책이 가능하다.<sup>56</sup>



‘생태적 산업 정책’<sup>57</sup>에 따른 전략적 투자는 총 수요를 강화하는 동시에 그 방향을 인도할 수가 있다. 녹색 혁신이야말로 탈 탄소 경제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노동력의 새로운 숙련화를 통한 녹색 일자리, 친환경 제품을 위한 신규 시장, 수평적 에너지 네트워크와 각종 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안보 등은 ‘제 3차 산업 혁명’의<sup>58</sup> 역동성을 펼쳐낼 것이다.

### 자원 효율성

자원 효율성이 높아지면 비용이 감소하고 총 요소 생산성도 올라가며 산업 부문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와 동시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아시아에서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환경의 안정성에도 기여한다.

### 5.3.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여러 전략적 목표

이러한 여러 성장 동력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 국가, 시민 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구조적 조건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책 입안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도전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1. 지구적으로 경제 성장이 저조한 환경에서는 신흥 시장국도 선진국 수요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국 내의 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sup>59</sup> 총수요의 침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통하여 소비 수요를 부양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진보적인 임금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 사회보장 시스템과 누진적 조세 체제 또한 총 수요를 자동으로 안정시키는 장치로서 필요하다.<sup>60</sup> 냉철하게 보자면 선진국 경제에서는 경제 성장의 침체와 실업 증가가 나타날 전망이며, 따라서 국가는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 **누구도 배제되는 일이 없는 경제 제도**들을 두어 모든 사람이 경제생활에 참여하도록 힘을 키우게 한다. 모든 이들의 재능을 동원하려면 모두에게 똑같이 시장

에 대한 접근과 제대로 된 노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3. 국가는 교육과 의료 같은 **공공재**들을 제공하여 노동력의 생산성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업보험제도는 경기가 급작스럽게 악화하였을 때 (단기)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된 노동력을 유지하며, 재교육을 장려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 지속 가능한 성장

4. 선진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하려면 국가, 가계, 금융, 기업 등 전 부문이 과도한 차입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sup>61</sup>

지구적 금융 시스템에서 생겨나는 불안정성과 외부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 차원의 리스크를 유념하는 규제**의 틀을 실행해야 한다. 단기적 투기와 그림자 은행 시스템은 금지되거나 최소한 엄격한 규제로 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국가는 금융 부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과 규제 틀을 (다시) 구축하여야 한다.

5. 투자 기관들이 급격하게 자본을 빼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파산 위험을 안게 되며, 심지어 나라 전체의 경제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할 능력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국내외 수준에서 모두 도입해야만 한다. 통화 질서의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를 도입하여 상업적 흐름과 금융적 흐름의 여러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 지구적 불균형을 통제된 방식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구적 외환 보유 시스템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구적인 준비 통화로서 미국 달러화가 맡고 있는 역할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sup>62</sup>

지구적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조정과 각국이 보호주의에 의존하면서 벌어지는 제로섬 게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협조와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엄청난 양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걱정에서 나온) 필요를 완화한다면 이는 지구적 총수요의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파산, 경쟁 정책, 금융 규제 같은 핵심적인 시장 규제 정책들은 지구적 수준에서 법령화할 필요가 있다.<sup>63</sup>



하지만 워싱턴 합의의 결합투성이 경제 이론과 정책은 양자간 (자유 무역 및 투자) 협정을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 및 제도의 유전자에 여전히 각인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각국 정부가 효율적으로 자국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 **지구적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신흥 강대국들이 설립한 여러 제도 및 기구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sup>64</sup>

6. 국제 무역의 불균형에서 생겨나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거시 경제 정책을 사용하여 **경상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흥 시장국들이 겪고 있는 변화에서 수출 수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이 때문에 각종 외부 충격에 대한 여러 형태의 취약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내수를 강화하면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국제 수준의 정책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무역 자유화는 충격 요법 같은 것을 삼가고 점진적인 순서를 따라야 하며, 힘든 상황에 처한 산업들의 노동력을 다 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과 결합되어야만 한다.

7. 정책 공간을 다시 확보하고 국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각국은 자국의 예산을 구조적으로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공공 투자 및 소비, 경기 하강에 맞서는 위기 대응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필요하며, 국가는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이 두 종류의 필요를 어떻게 해서든 양립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 기반을 확장하고 (여기에는 조세 회피처의 폐쇄 조치도 포함된다), 누진적 조세 정책들을 도입하고, 부채의 급증 특히 외국 통화로 가치가 매겨진 부채가 불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국가의 지출은 위기의 대응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경기 순환에 맞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녹색의 역동적 성장

8. 생계 수단을 보존하려면 생산, 주택, 교통 및 수요를 에너지 및 자원 사용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저탄소 경제로 이동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설정하고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9. 시장이 장기적 전략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 **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의 방향을 인도**해야 한다.<sup>65</sup> 인프라, 노동력의 숙련,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공공 투자는 생산성과 혁신 사이의 격차를 메우고 또 양자를 강화시킬 수 있다.<sup>66</sup> 민간 부문은 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을 탐색해야 한다. 생태적인 산업 정책은 녹색 기술을 시장에 도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sup>67</sup> 전체론적인 가격 메커니즘들, 규제, 목표 투자 등을 현명하게 배합하면 연구 및 개발의 방향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며 투자자들 및 시장에도 일정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

### 요약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대안적 발전 모델의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서는 각국의 연구 모임이 자신들의 지역 상황에 맞도록 이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해야 한다.

## VI. “내일의 경제” 담론의 틀: 발전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하자

“내일의 경제” 발전 모델이 추천하는 정책들이 현실에 실현될 가능성은 그 정책들의 학문적 가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다. 현상 유지를 원하는 연합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무지개 연합을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공통 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무지개 연합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힘이 있는 담론을 만들어 퍼뜨려야 한다. 따라서 “내일의 경제” 발전 모델은 기술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정치적 의사소통을 촉진할 도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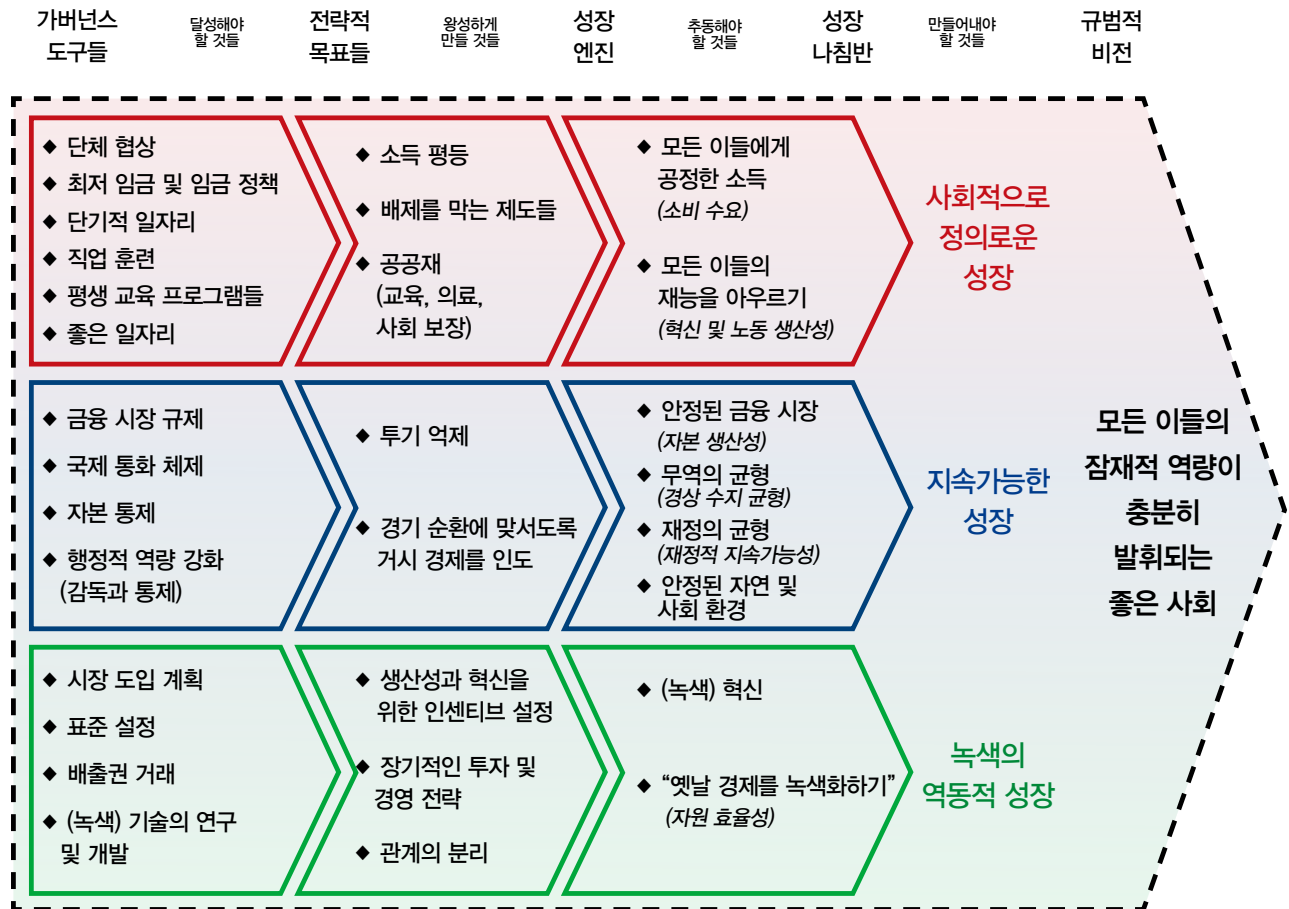


“내일의 경제” 담론 틀은 이러한 방향으로 내딛는 첫 발자국이다. 이는 엄청난 양의 지식을 사회적 정의, 지속가능성, 녹색의 세 가지 차원으로 간략하게 만들었다. 이 세 개의 의사소통 축들을 중심으로 하여, 오직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 도구를 평범한 사람의 정서에도 와 닿는 규범적 비전과 연결시킬 수 있는 논지를 단 네 개의 단계를 통하여 끌어내는 것이다. 그 반대이기도 하다. 규범적 비전을 통하여 국가와 민간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향성을 부여할 수 있고 또 서로 일관성을 가진 여러 정책을 개발하도록 촉진할 수도 있다. 이 담론의 틀은 이러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 구성을 쉽게 만들어 주기 위한 논지를 제시해 준다.

- 규범적 비전은 사회가 나가야 할 큰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지향성을 제시해 준다.
- 성장 나침반은 국가, 민간, 시민 사회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규범적 비전에 달성할 조건들을 얻는 데 필요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공통 방향을

제시해 주는 도구이다. 성장 엔진은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가정들을 분명하게 해 준다. 이는 내일의 경제 담론의 핵심이며, 기술주의 정책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전을 만들게 한다. 동시에 이는 생태적, 사회적, 정치적 여러 도전이라는 좀 더 큰 그림 속에 경제를 놓도록 해 준다.

- 전략적 목표들은 모든 부문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도구들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개별적 도구들을 추천한다. 각국의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국가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는 워크숍은 맞춤형 거버넌스 도구들을 결정한다. “아시아·유럽 내일의 경제 대화”는 이렇게 각 나라마다 어떤 거버넌스 도구들을 사용하여 어떤 경험과 교훈을 배웠는지 공유하고 교류하는 문서 저장소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모든 나라에 적용될 획일적인 정책 청사진을 정식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담론 틀을 통하여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투자자와 소비자는 현명한 선택을 하며, 정당은 당 강령을 개발하고, 연구자는 연구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 기관과 관료 조직들, 시민 사회와 언론 매체는 여러 정책을 계획, 실행, 통제, 감시하는 데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는 장기적 비전과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회에 살고 싶은가?”) 정책 나침반을 (“어떻게 이러한 사회에 도달할 것인가?”) 필요로 한다. 이 담론 틀은 유의미한 공공의 논쟁을 가능하게 할 기준들과 벤치마크들을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과연 옳은가 틀린가?”) 제공한다. 또 이는 여러 정책을 좀 더 큰 그림 속에 놓음으로써 정책들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즉 “이러한 인센티브를 쓴다면 어떤 경로가 나타나게 되는가?”). 다시 말해, “내일의 경제” 담론 틀은 모든 행위자에게 단일한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분절화 되어 있는 하위 부문들에 방향을 인도할 여러 신호를 보냄으로써, 다원적 사회에서 어떠한 발전 경로가 옳은가에 대한 민주적 논쟁이 벌어지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복잡성을 줄이는 것이 비록 필수불가결한 첫 번째 단계이기는 하지만, 담론의 헤게모니를 쟁취하는 일은 이것만으로 이룰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적 용어들을 밥상머리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평이하고도 단순한 용어로 바꾸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담론은 언어의 마술사들이 무더기로 동원되어 이런 언어들을 한 땀 한 땀 만들어냄으로써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주요한 메시지들을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이야기들로 정식화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낙수 효과(trickling-down)”니 “국가를 떠돌린다(getting the state off your back)”니 하는 말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손”이니 “야수 본색(animal spirit)”이니 하는 말들을 현대판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말끔히 정리하도록 시장에 맡겨 두자”와 “기업을 규제에서 해방시켜라” 등은 한 세대에 걸쳐 정책 입안자들에게 나침반 노릇을 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슬로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구호들은 신자유주의 세계관에 굳건히 뿌리박고 있으며, 신고전파 경제학 이론에 탄탄하게 기초를 두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정식화하여 내놓을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러한 고

민 덕분에 신고전파 담론이 정치 영역의 최중심을 차지한 바 있지 않은가.

아시아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영향력은 있어도 결코 헤게모니적인 위치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아시아 이데올로기”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각 나라마다 주류적 담론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회는 그 나라의 특정한 사상, 신념, 태도 같은 헤게모니로 똑같이 강화된다. 이러한 것들은 현지의 문화에 깊게 뿌리박고서 옛날부터 내려온 신화들, 집단적 정체성, 민족적 트라우마 등에서 정당성을 끌어낸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전 경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담론적 헤게모니를 부수고 새로운 담론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제부터 나는 “내일의 경제” 발전 모델의 기술적 내용들을 정치적 의사소통을 위한 틀로 전환시켜 보겠다. 그 요소들을 규범적 비전, 성장 동력, 전략적 목표, 거버넌스 도구라는 네 가지 담론 축을 따라 배열하는 가운데 이들을 현존하는 여러 이론 및 잠재적 연합 세력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담론의 동맹을 구축한다는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는, “내일의 경제”를 이루는 여러 변수를 다시 가다듬어서 다른 담론의 여러 요소와 연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것들과 실제 연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정식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나올 용어들과 사용법에 대해 “내일의 경제 아시아-유럽 대화” 참가자들이 승인하고 찬성한 바 있지만, 이는 단지 다음 단계에서 “내일의 경제”가 내놓을 이야기를 재평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 그런 것일 뿐이라는 점은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다. 용어 선택의 이유를 밝힘으로써, 가장 강력한 담론을 구축하는 최상의 방법에 관한 전략적 토론이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 6.1. 규범적 비전: “모든 이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회”

플라톤 이래 자유와 평등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러 민주주의 사회의 주된 도전이었다.<sup>68</sup> 좀 더 최근에 들어서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은 적극적 자유로서 역량 강화를 요구하였고, 존 롤스(John Rawls)는 가장 어려운 위치에 처한 이들에 대한 적극적



평등을 정의를 떠받치는 한 기둥으로서 내세웠다.<sup>69</sup> 아 마르티아 센(Amartya Sen)이 말하는 자유와 평등의 결합이란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여러 장벽을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제거함으로써 “모든 이가 잠재적 가능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상황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sup>70</sup> 따라서 “내일의 경제”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펼치는 좋은 사회”의 조건들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평등한 삶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 사회”라고 하는 유럽인들의 진보적 이상과도 어울리는 것이다.<sup>71</sup> 아시아의 맥락에서 보자면, “자유로서의 개발”이라는 말은 인도와 같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호소력을 가지며 또 동아시아식 개발국가들에서는 이를 국가의 지도적 역할과 연결시킬 수 있다. 사회적 조화를 강조하고 또 좋은 사회를 위한 조건들을 마련하는 적극적 역할을 국가가 맡는다는 생각은 동아시아의 여러 가치와 충분히 어울릴 수 있다.

## 6.2. 성장 나침반: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탈 성장’의 담론들 중 일부는 아시아에서 비롯한 것이며 (“행복”<sup>72</sup> 그리고 “자급자족”<sup>73</sup>) 이 지역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 걸쳐 널리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GDP 성장을 낮출 것을 목표로 삼는 모든 접근법에 대해 의구심이 존재한다. 인도와 중국은 지구적 기후 거버넌스 레짐에 참여하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거니와,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사실은 자기들의 경제 발전을 망쳐놓으려는 숨은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은 소비를 줄임으로써 기후 변화에 맞서자거나 수출을 둔화시켜서 국제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호소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지 않는다. 아무리 ‘행복’이나 ‘자급자족’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성장 축소(de-growth)’는 아시아의 주류 담론과는 어울릴 수가 없다. 하지만 “내일의 경제”는 “더 높은 규범적 목표를 갖는 질적 성장”을 (이를 통해 좋은 사회의 조건을 만든다) 강조하며, 이 또한 전체론적인 탈 성장 담론들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공유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일의 경제” 모델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은 성장 나침반이다. 이 모델을 정치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바꾼다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성장 나침반에 적절한 이름을 붙일 때는 기존 모델들과의 연관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 세력과 담론의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 세 개의 축을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녹색의 역동적 성장”으로 이름 붙이는 목적은 “내일의 경제” 모델을 ‘담론 지형’의 중앙에 놓고자 함이다.<sup>74</sup> 일단 중앙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무수한 행위자들과 다양하게 연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의 영역은 이전 포드주의 시절에는 사회민주주의 패러다임이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발흥한 이후로는 진보적 담론들이 수세에 몰려왔다. 최근에 들어서 “사회적 성장(Social Growth)”<sup>75</sup>, “괜찮은 자본주의(Decent Capitalism)”<sup>76</sup>, “평등이 우선한다(The Spirit Level)”<sup>77</sup> 등의 접근법들이 신자유주의 담론으로부터 헤게모니의 위치를 탈환하려 시도한 바 있다. UN과 그 산하의 개발 은행들은 “배제 없는 성장(inclusive growth)”을<sup>78</sup> 장려하고 있다 (즉 “폭넓은 사회적 기반의 성장, 공유되는 성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성장”).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이런 것들 모두와 양립 가능하며, 진보 운동의 전통을 함께 공유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차원은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녹색의 역동적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론 연합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금융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불균형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는 차원 하나를 구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케인즈적인 접근을 부활시키는 것이며, 아시아에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신 개발주의(New Developmentalism)’와<sup>79</sup> 양립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 녹색 성장에 관해 사람들과 좀 더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려면, 지구적 기후 거버넌스 협상에서 강조하는 고통 분담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역동적 성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잠재적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아시아 참가자들은 생태적 위기에 대처함에 있어



“하나를 한다고 해서 나머지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실용주의적인 접근법을 선호한다.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탄소 배출 목표, 기술적 혁신, 산업 재구조화, 소비 패턴의 변화 등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또 동시에 높은 성장률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이 희망하는 바이다. 따라서 “내일의 경제” 담론은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안정성과 연상 관계를 맺을 것이 아니라 ‘역동적 성장’이 제공하는 여러 가능성과 연관시키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녹색 뉴딜(Green New Deal)”이나<sup>80</sup> “제 3차 산업 혁명(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sup>81</sup> 같은 녹색 성장 담론들을 언급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이라는 결합물은 사회민주주의자와 노동 운동, 금융 자본주의 비판가들, 계명된 보수주의자들, 환경론자들, 개발론자들 사이에 폭넓은 무지개 연합을 형성할 강령의 역할을 한다. 이는 인도의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하며, 배제가 덜한 성장(Faster, Sustainable and more Inclusive Growth)’과<sup>82</sup> 대단히 유사하다. 태국의 개발 계획은 ‘정의로운 사회, 질적 성장, 사회적, 경제적, 자연적 지속가능성(Just Society, Quality Growth and social, economic and natural Sustainability)’을<sup>83</sup> 목표로 삼는다. 균형에 대한 강조는 중국이 이상으로 삼는 ‘조화로운 발전’과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동시에 “내일의 경제” 모델은 신자유주의의 ‘워싱턴 합의’와도 구별되지만 ‘성장 축소(De-growth)’의<sup>84</sup> 급진적인 이론들과도 뚜렷하게 구별된다.

### 6.3. 성장 동력들

성장을 추동하는 여러 요소야말로 모든 정치경제 담론의 핵심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연결 고리로 하여 기술적인 정책 입안과 규범적 목표들이 연결되는 것이다. 성장 동력들은 실제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러한 동력들은 전문가들과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희망을 걸고 있는 “마법”인 셈이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동력들은 이미 자신들이 활발하게 힘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상당 정도 이미 규정해 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이 돌아가고 또 누구의 재능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힘을 얻는다”**

신자유주의는 노동과 공공재에 대해 그저 경쟁력을 값아먹는 비용일 뿐이라고 비방을 늘어놓지만, “내일의 경제” 모델은 인적 자본이야말로 생산성과 혁신의 주된 원천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이에 맞서고자 한다. 이렇게 “배제를 막는 제도들”을<sup>85</sup>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강조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 질 높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노동력의 숙련과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새롭게 가치 매김을 할 수 있게 된다. 노동 생산성에 초점을 둬으로써 고용주들의 관심사인 경쟁력과 노동자들의 요구인 노동력 숙련의 문제를 결합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담론을 짧게 풀어보자면 아마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것이다.

*“교육, 의료, 사회 보장 등이 제공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배제를 막는 제도들은 이렇게 모든 이들의 잠재력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을 추동한다.”*

소득이 발생해 사람들의 소비를 창출하게 되므로, 이는 세계 경제 상황 변화의 충격에 대한 취약성 문제를 소득 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연관시킬 수 있도록 해 준다.

*“소득의 평등은 국민 대다수의 소비 지출을 자극한다. 소득으로 추동되는 소비 수요는 부자와 가난한 이들 사이의 사회적 격차를 좁혀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을 촉진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무역과 재정의 균형은 물론 금융,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안정성에 의해 힘을 얻는다.”**

“내일의 경제” 담론은 ‘안정적인 금융 시장’을 강조함으로써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좌파들로부터 (ATTAC, ‘오쿠파이’ 운동) 노동 운동, 새 케인즈주의자들을 거쳐 질서 자





유주의자들 (ordo-liberals) 과 “자본주의의 과도한 양상들(excesses)”을 비판하는 보수주의자들(기독교 민주주의자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스펙트럼의 금융 자본주의 비판자들과 연결된다.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로 아시아의 주류 세력들 또한 규제 없는 금융 시장과 자유로운 자본 흐름에 대해 항상 걱정을 하고 있다.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 그리고 국제적 통화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는 단기적 투기를 억제하면서 생산성과 혁신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장려한다. 안정적인 금융 시장은 호황과 거품 붕괴 순환의 리스크를 줄이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국제 무역의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좌파 쪽의 지구화에 대한 회의론자들(ATTAC, “점령하라!”)과 가난한 나라들에 있는 ‘공정한 접근(fair access)’ 옹호자들(세계 사회 포럼, Focus on the Global South)의 가교 역할을 한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논쟁이 치열하며 정치적으로도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이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유럽의 국제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일어나면서 이것이 “포퓰리즘식 지출”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또 장기적인 “재정적 파멸과 경제 붕괴”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주의자들이 긴축 정책으로 발생하는 파멸적인 경제적, 사회적 결과들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은 엘리트들이 사회 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헤게모니를 되찾아올 필요가 분명히 있다. “내일의 경제” 모델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균형 예산이란 안정성과 거시 경제적 평형 상태를 목표로 하지만, 균형 재정 강경파들이 정책 입안 과정을 불모로 잡기 위한 구실로 쓰는 그런 말은 아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도 총계적 명목치의 제한을 목표로 설정하던 이전의 초점을 수정하여 이제는 예산 적자와 공공 부채의 양보다는 공공 지출의 구성과 질적 평가에 더 큰 중점을 두도록 장려하고 있다.<sup>86</sup>

“지구적 불균형과 국내적 불균형을 회복하려는 거시 경제 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환경과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필요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녹색의 역동적 성장이라는 두 개의 차원들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안정적 환경이 가져오는 안정화의 기능을 각별히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정된 자연 환경과 사회적 평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녹색의 역동적 성장은 옛날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혁신을 통해 추동된다.”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가 혁신을 촉발한다는 생각은 “녹색 뉴딜”, “제 3차 산업 혁명”<sup>87</sup>, “생태적 산업 정책” 등과 같은 개념들로 정식화된 바 있다. 아시아에서는 “등 타고 넘기(leap-frogging)”를 통하여 선진국들의 오류를 피하고 곧바로 생산, 교통 및 수송, 주택에서의 자원 효율성의 단계로 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게 유용할 것이다.<sup>88</sup> 녹색 혁신이 가져올 여러 기회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내일의 경제”는 녹색 성장의 “역동적” 잠재력을 강조한다.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녹색 시장과 녹색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녹색 혁신은 녹색의 역동적 성장을 촉진한다.”

하지만 “내일의 경제” 담론은 녹색 성장의 기회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며, 모든 부문에서 역동성을 장려해야 한다.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주된 도전은 여전히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가치 사슬의 위로 이동’하는 것이다. 국가의 길잡이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아시아의 발전 국가 철학과도 충분히 조화되는 것이며 또 ‘베이징 합의’와도 양립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국가가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의 전통에 내재해 있다. 미국에서도 30년간에 걸쳐 “큰 정부 대 작은 정부”라는 대립 구도를 겪고 난 후, 시장이 실패할 때에는 개입할 줄 아는 “현명한 국가(smart state)”를 장려하는 흐름



이 늘어나고 있다.

*“시장이 실패할 때에는 현명한 국가가 방향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역동적 성장으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국가는 생산성 증대와 혁신으로 투자가 일어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에 의한 성장 경로 설정은 녹색 혁신뿐만 아니라 녹색 생산성 증대 또한 목표로 삼는다. 자원 효율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에너지 비용의 경쟁력이라는 관심과 탄소 배출에 대한 환경적 관심을 연결한다. 한정되어 있는 자원의 사용으로부터 생산, 교통 및 수송, 주택을 분리해내는 과제는 이미 “옛날 경제를 녹색화하기”로<sup>89</sup>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옛날 경제를 녹색화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하고 살고 이동하는 방식을 한정된 자원의 사용과 분리해 내는 것을 뜻한다.”*

### VII. 전망: 변화를 위한 정치적 세력 키우기

다음 단계로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는 “내일의 경제” 발전 모델을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다. 더 광범위한 생태적, 사회적, 정치적 도전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고 ‘좋은 사회’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토론의 장에 경제사가들, 정치학자들, 환경 및 기후 변화 전문가들, 철학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각국의 연구모임들은 이 모델을 자국의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각 나라가 처한 고유 문제들에 대처하는 데 적합한 맞춤형 정책 혼합을 대략적으로 그려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대안적인 담론에 대한 작업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내일의 경제” 담론 틀은 새로운 담론을 향해 첫 발을 댄 것이다. 기술적 전문 용어들은 밥상머리에서도 오갈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바꾸어 내야 한다. 그리하여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는 경제학자들의 공동체를 훌쩍 넘어서서 의사소통의 전문가들에게도 동참할 것을 명시적으로 호소할 것이다.

“내일의 경제” 모델은 정책 나침반이자 담론 틀이기도 하

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이는 여러 사회 세력이 각자의 차이점을 넘어서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폭넓은 사회적 연대를 이루게 하는 강령의 기능도 한다. 무지개 연합을 통해 여러 세력이 합치는 것이야말로 경제 발전 경로를 변환시키기 위한 정치 투쟁에서 성공하는 핵심 관건이다. 즉,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녹색의 역동적 성장 정책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확률은, 무지개 연합이 정책 입안자들의 정치적 계산에 영향을 줄 것을 목표로 하여 어느 만큼이나 정치 세력을 동원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의 목표는 정당, 행정부, 재계, 실행 기구들,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비정부 단체, 대학, 싱크탱크, 전문 직종 연합체, 중앙은행, 개발 계획 수립자들, 언론 매체에 폭넓게 걸치는 무지개 연합을 창출하는 것이다.

지구적 경제의 무게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오늘날, 아시아에서 새로운 담론이 헤게모니를 가지게 된다면 이것이 서구의 담론 지형에도 일정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시아-유럽을 아우르는 공통의 진보적 담론이 나타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국가, 사회, 시장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바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는 오늘날의 여러 도전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갈 뿐만 아니라 “내일의 경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담론적 토대 또한 준비하고자 한다.



## 서명인

다음의 경제학자들은 이 글의 모든 명제들에 대해 완전한 동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각자 개인 자격으로 이 글의 이론적 접근법과 주된 정책적 제안들을 지지하는 의미로 이름을 올렸다.

**A. Prasetyantoko**, Atma Jaya University, Indonesia

**Apichat Satitniramai**, Thammasat University, Thailand

**Atul Sood**, Jawaharlal Nehru University, India

**Chantana Banpasirichote Wungaeo**, C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Daniel Lind**, chief economist at Unionen, Sweden

**Hansjörg Herr**, Hochschule für Wirtschaft und Recht, Germany

**Hogyun Kim**, Myunggi University, South Korea

**Klaus Busch**, Universität Osnabrück, Germany

**Klaus Jacob**, Freie Universität Berlin, Germany

**Le Dang Doanh**, Senior Economist, Hanoi, Vietnam

**Gatot Arya Putra**, Indonesian Research and Strategic Analysis

**Masayuki Otaki**, University of Tokyo, Japan

**Moneer Alam**, Institute of Economic Growth, India

**Nguyen Tue Ah**, 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 Vietnam

**Pasuk Phongpaichit**, Emeritus Professor of Political Economy,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Pokpong Junvith**, Thammasat University, Thailand

**Ram Gopal Agarwala**, Economist, India

**Sebastian Dullien**, Hochschule für Technik und Wirtschaft Berlin, Germany

**Somkiat Tangkitvanich**, 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Tae-Hee Hong**, Chosun University, South Korea

**Thitinan Pongsudhirak**, Institute of Security and International Studies, Thailand

**Wenfeng Wei**, China Institute for Reform and Development, China

**Xingmin Yin**, Fudan University, China

내일의 경제(EoT) 플랫폼을 지지하고 싶은 분은 Facebook ([www.facebook.com/TheEconomyOfTomorrow](http://www.facebook.com/TheEconomyOfTomorrow))을 방문해 주십시오. 또한 내일의 경제 사이트에서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EoT 커뮤니티에 속한 분들과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문헌과 후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아시아 내일의 경제 시리즈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는 <http://www.fes-asia.org/pages/shaping-the-economy-of-tomorrow-in-a-sustainable-way/publications.php> 에서 볼 수 있다.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has been published in various blogs, see <http://marcsaxer.blogspot.com/> .

2 Klaus Busch, Is the Euro Failing? Structural Problems and Policy Failures Bringing Europe to the Brink, FES Study, April 2012.

3 Henning Meyer, Analysing the Eurozone Predicament – Not One Crisis but Three, in ZBW –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Intereconomics 2012-5, p.272ff.

4 George Soros, How to save the EU from the euro crisis. There is now a real danger that the euro crisis may end up destroying the European Union, Project Syndicate, The Guardian, 9.4.2013,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3/apr/09/george-soros-save-eu-from-euro-crisis-speech> accessed 29.4.2013.

5 David Graeber,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2011.

6 Ulrich Beck, A German Europe, Polity 2013.

7 David Priestland, *Merchant, Soldier, Sage, A New History of Power*, Penguin 2012.

8 Susan Strange, Casino Capitalism, 1986.

9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Das Ende des Kasino-Kapitalismus. Globalisierung und Krise., Berlin 2009.

10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62.

1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p.82ff, Stiglitz Report, 2010.

12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p.62ff.

13 Michael Dauderstädt, “Germany’s socio-economic model and the Euro crisis”,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33, n° 1, January-March (2013) 3-16.

14 Michael Dauderstädt, “Germany’s Economy - Domestic Laggard and Export Miracle”,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Daniel Lind/ Christian Kellermann , “The Swedish Economy - Structural Fragility beneath Strong Macroeconomic Performance”,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15 Charles Goodhart, Gerhard Illing, *Financial Crises, contagion,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a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Joseph Stiglitz and members of a

UN Commission of Financial experts, The Stiglitz Report, New York 2010, Preface xi.

16 Nouriel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17 Stefan Collignon, “The Moral Economy and the Future of European Capitalism/ Mastering the Crisis”, *CER Rapport on Europe*, (2009).

18 Philip G. Cerny, Paradoxes of the Competition State: The Dynamics of Political Globalization, in: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ume 32, Issue 2, pages 251–274, April 1997, first published online: 22 MAR 2007.

19 Sanford J. Grossmann/ Joseph Stiglitz, On the Impossibility of Informationally Effective Markets, 70 American Economic Review 393, 405 (1980); Joseph Stiglitz, “The Anatomy of a Murder: Who killed America’s economy?”, *Critical Review* 21 no 2-3 (2009): 329-39; Stiglitz Report, 2010, p.14, 21; Geoffrey M. Hodgson et al, Letter toHer Majesty the Queen, 10 August 2009, <http://www.feed-charity.org/user/image/queen2009b.pdf> accessed 22.4.2013; David Colander et al,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Systemic failure of Academic Economics (Dahlem Report”), Kiel Institute for World Economy Working Paper No. 1489, Feb 2009; Stefan Collignon, “The Moral Economy and the Future of European Capitalism/ Mastering the Crisis”, *CER Rapport on Europe*, (2009).

20 Richard A. Posner, The Crisis of Capitalist Democrac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Chapters 8 and 10.

21 Daron Acemoglu, James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012.

22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2013.

23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

24 Henning Meyer, *ibid*, 2012, p.276.

25 Marc Saxer, Democracy 3.0: Zeifüre in Systemupdate!, Blog, first published 22.5.2012, <http://sagwas.net/democracy-3-0-zeit-fur-ein-systemupdate/>.

26 Frank Schirrmacher, Ego. Das Spiel des Lebens, Karl Blessing Verlag, München 2013.

27 Wilkinson/ Pickett, *ibid*, 2009.

28 Joshua Kurlantzick, Why the ‘China Model’ Isn’t Going Away. From Bangkok to Caracas, Beijing’s style of authoritarian capitalism is gaining influence, The Atlantic.21.3.2013, <http://www.theatlantic.com/china/archive/2013/03/why-the-china-model-isnt-going-away/274237>

29 Ramgopal Agarwala and Le Dang Doanh, “Booms, Bubbles and Busts,” *4<sup>th</sup>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30 Ramgopal Agarwala, “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India”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January 2012.



- 31 William Pesek, The BRICS Expose the West's Hypocrisy, Bloomberg, 29.3.2013. <http://www.bloomberg.com/news/2013-03-28/the-brics-expose-the-west-s-hypocrisy.html> accessed 31.3.2013.
- 32 Stiglitz Report, Preface xviii.
- 33 Stiglitz Report, p.7f.
- 34 Nomura economists Zhiwei Zhang/ Wendy Chan cited in NithiKaveevivitchai. Cracks appear in China, Bangkok Post 1.4.2013.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343371/cracks-appear-in-china> .
- 35 Compare here: PiotrStolarczyk and AleksanderLaszek “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Poland”,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 36 Pham LanHuong, “Booms, Bubbles and Busts,” and AtulSood on the case of Gujarat (India), 4<sup>th</sup>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 37 Pasuk Phongpaichit, PornthepBenyaapikul, “Locked in the Middle-Income Trap: Thailand’s economy between resilience and future challenges”,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EoT)*, March 2012;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 38 Janti Gunawan and Dr. Kym Fraser, “Green Jobs in Indonesia - Potentials and Prospects for National Strategy”, *Economy of Tomorrow*, March 2012; ChaiyasitAnuchitworawong, PrinyaratLaengcharoen and KannikaThampanishvong, “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Thailand: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Perspectives,”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Kim, Hyun-woo, Han, Jae-Kak; Park, Jun-hee, “Green Growth and Green Jobs in Kore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 *Economy of Tomorrow*, June 2012; Nguyen chi QuocDoiMoi – “An Outlook on the Potential of Green Jobs in Vietnam”, *Economy of Tomorrow*, November 2012.
- 39 Wu Libo “Green Jobs in China - Comparative Analysis, Potentials & Prospects”,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
- 40 Sebastien Dullien, Hansjorg Herr, Christian Kellermann, *Decent Capitalism: A Blueprint for Reforming our Economies*, Pluto Press 2007.
- 41 Nouriel Roubini,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A crash course in the future of finance*. New York 2010.
- 42 Nicholas Stern, Amar Bhattacharya, Mattia Romani, Joseph E. Stiglitz, A New World’s New Development Bank, Project Syndicate, 1.5.2013,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benefits-of-the-brics-development-bank> accessed 3.5.2013.
- 43 Joseph Stiglitz, The Stiglitz Report, 2010, p.11.
- 44 Michael Spence, 2012, p.189.
- 45 Thomas Herndon/ Michael Ash/ Robert Pollin, Does High Public Debt Consistently Stifle Economic Growth? A Critique of Reinhart and Rogoff, Amherst, 15.4.2013. [http://www.peri.umass.edu/fileadmin/pdf/working\\_papers/working\\_papers\\_301-350/WP322.pdf](http://www.peri.umass.edu/fileadmin/pdf/working_papers/working_papers_301-350/WP322.pdf) accessed 2.5.2013.
- 46 Lee Jeong-Woo, Kim Ky-Won, Kim Ho-Gyun and Cho Young-Tak, “Socially Just, Sustainable and Dynamic Growth for a Good Society - A Case Study for Korea”,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November 2012.
- 47 Stiglitz Report, p.200.
- 48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58, 74.
- 49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
- 50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1936.
- 51 A. Prasetyantoko, “Booms, Bubbles and Busts,” 4<sup>th</sup>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2012, p.74,159.
- 52 Michael Spence,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Picador 2011/2012, p.155.
- 53 Stiglitz Report, p.196.
- 54 see Stiglitz Report, 2010, p.57ff.
- 55 Michael Spence, 2012, p.141.
- 56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cornerstones of an agenda for Germany, FES Perspektive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Save jobs or drive structural change forward? Ten theses on industrial policy in the economic crisis, FES London, 2009; Jörg Meyer-Stamer, ModerneIndustriepolitikoderpostmoderne-Industriepolitiken?, FES 2009.
- 57 Machnig, Matthias,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s a key element of a sustainable economy in Europe, FES Perspective, December 2011; Mikfeld, Benjamin, Ecological industrial policy: a strategic approach for social democracy in German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October 2011.
- 58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2011; Martin Jänicke, Klaus Jacob, “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Solutions to the crisis of resource-intensive growth,” *FFU-report* 02-2009.
- 59 Michael Spence, 2012, p.188f.
- 60 Stiglitz Report, p.22.
- 61 Michael Spence, 2012, p.151 Michael Spence, 2012, p.141.
- 62 RamgopalAgarwala at the 4<sup>th</sup> Asia Europe EoT Forum in Bangkok, 25.-26.2.2013; Zhou Xiaochuan, “Refor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3.3.2009, <http://www.bis.org/review/r090402c.pdf>; JörnGriesse& Christian Kellermann, “What comes after the dollar?”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April 2008, <http://library.fes.de/pdf-files/id/ipa/05257.pdf>;



Jin Zhongxia,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ramework. Dollar dominance here to stay. British pound seen as one of four smaller reserve currencies with renminbi and euro. "In the OMFIF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Forum) commentary, 7.2.2013, Vol.4 Ed.6.4 tinyurl.com/ Jin-Zhongxia. All URL accessed 20.3.2013.

<sup>63</sup> Stiglitz Report, p.196.

<sup>64</sup> Marc Saxer, Multilateralism in Crisis? Global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Thomas Renard and Sven Biscop, The European Union and Emerging Powers: How Europe Can Shape a New Global Order, Ashgate, May 2012; Stern/ Amar/ Romani/ Stiglitz, ibid.

<sup>65</sup> Alfred Pfaller/ Philipp Fink, An industrial policy for social democracy, 2011; Alfred Pfaller/ Philipp Fink, ibid, 2009; Jörg Meyer-Stamer, ibid, 2009.

<sup>66</sup> Sethaput Suthwart-Narueput, "Public Investment: Identify a mix of policy guidelines which could lead to more balance or unbalanced growth" *4<sup>th</sup> Economy of Tomorrow Regional Forum*, Bangkok Thailand, February 2013; Michael Spence, p.74f.

<sup>67</sup> Machnig, ibid, 2011; Mikfeld, ibid, 2011.

<sup>68</sup> Plato, *The Republic* (385 B.C.).

<sup>69</sup>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 1972.

<sup>70</sup>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sup>71</sup> Jon Cruddas and Andrea Nahles. Building the Good Society, The project of the democratic left, compass 2009; Henning Meyer/ Christian Kellermann, Die Gute Gesellschaft: Soziale und demokratische Politik im 21. Jahrhundert, edition suhrkamp 2013.

<sup>72</sup> Bruno S. Frey, Alois Stutzer.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2002): 402-435.

<sup>73</sup> Medhi Krongkaew "The Philosophy of Sufficiency Economy", *Kyoto Review Feature*, October 2003.

<sup>74</sup> Benjamin Mikfeld, "Transformation, Hegemonie und Diskurs, Aktuelle Denkmuster über Krise, Wirtschaft Wachstum und Gesellschaft", SPW 4/2012; the map on p.21 builds on Hubert Schillinger's mapping on development discourses, 2011.

<sup>75</sup> Michael Dauderstädt, "Social Growth, Model of a progressive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FES, January 2012.

<sup>76</sup> Dullien/ Herr/ Kellermann, ibid, 2007.

<sup>77</sup> Richard Wilkinson, Kate Picket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2009.

<sup>78</sup> UNDP, The International Policy Centre for Inclusive Growth (IPC-IG), <http://www.ipc-undp.org/pages/newsite/menu/inclusive/whatisinclusivegrowth.jsp?active=1> accessed 2.5.2013.

<sup>79</sup> São Paulo School of Economics of Getulio Vargas

Foundation Structuralist Development Macroeconomics Center, Ten Theses on New Developmentalism, 29.9.2010 <http://www.tentheseonnewdevelopmentalism.org/> accessed 4.4.2013; Luiz Carlos Bresser-Pereira, From old to new developmentalism in Latin America, FGC EESP Textos para Discussão 193, June 2009; Shahrukh Rafi Khan, Jens Christiansen (editors), Towards New Developmentalism

Market as Means rather than Master, Routledge 2.9.2010.

<sup>80</sup> The Green New Deal, retrieved from <http://www.greennewdealgroup.org> accessed on 22.03.2013.

<sup>81</sup> Rifkin, ibid, 2011; Jänicke/ Jacob, ibid, 2009.

<sup>82</sup> As specified by India's 12th Five Year Plan, cited in Mini Govindan and Jaya Bhanot, "Green Jobs in India - Potentials and Perspectives", *FES Asia Economy of Tomorrow series*, December 2012.

<sup>83</sup>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The Eleven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2012 (2012-2016), Bangkok, 2011.

<sup>84</sup> Institut d'études économiques et sociales pour la décroissance soutenable (2003) <http://decroissance.org/>, Nicholas Georgescu-Roegen, From bioeconomics to Degrowth: Georgescu-Roegen's new economics' in eight essays, April 2011; Serge Latouche, Degrowth economics: why less should be much more, Le Monde Diplomatique, November 2004.

<sup>85</sup> Daron Acemoglu, James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012.

<sup>86</sup> Noeleen Heyzer, Macroeconomics needs improving, Bangkok Post 22.4.2013, <http://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346375/macro-economics-needs-improving>.

<sup>87</sup> Jeremy Rifk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2011.

<sup>88</sup> Martin Jänicke, Klaus Jacob, "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Solutions to the crisis of resource-intensive growth," FFU-report 02-2009.

<sup>89</sup> Martin Jänicke, Klaus Jacob, ibid.



**저자 소개:**

**마크 작서(Marc Saxer)**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태국사무소 소장
- 아시아·유럽 ‘내일의 경제(Economy of Tomorrow)’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E-mail: [info@fes-thailand.org](mailto:info@fes-thailand.org)

[www.fes-thailand.org](http://www.fes-thailand.org)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1101호

(우) 110-742

**책임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Tel: + 82 (2) 745 2648

Fax: + 82 (2) 745 6684

E-mail: [info@fes-kora.org](mailto:info@fes-kora.org)

[www.fes-korea.org](http://www.fes-korea.org)

아래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fes.de/cgi-bin/gbv>

[cgi?id=10000&ty=pdf](http://www.fes.de/cgi-bin/gbv.cgi?id=10000&ty=pdf)